

2017 통일익식조사 정권교체와 안보위기: 기대와 전망

일시 2017. 09. 27.(수)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토론회 진행순서

개회식 정근식 통일평화연구원장 ————— 14:00~14:10

제1회의 **[조사결과 발표] 2017년 한국인의 통일의식** ————— 14:10~15:45

조사 개요 |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 인식 |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북한 인식 |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대북정책 인식 |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변국 인식 |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위협인식이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황정미(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휴식 Break time ————— 15:45~16:00

제2회의 **[패널토론] 정권교체와 안보위기: 기대와 전망** ————— 16:00~18:00

사회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토론 성기영 (통일연구원)

이상신 (통일연구원)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목 차

조사 연구 개요	01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1 통일 인식	05
송영훈 (강원대학교)	
발표2 북한 인식	17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발표3 대북정책 인식	37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주변국 인식	53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5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69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6 “위협인식(perceived threat)”이 탈북자 및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85
황정미(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2017 통일의식조사 개요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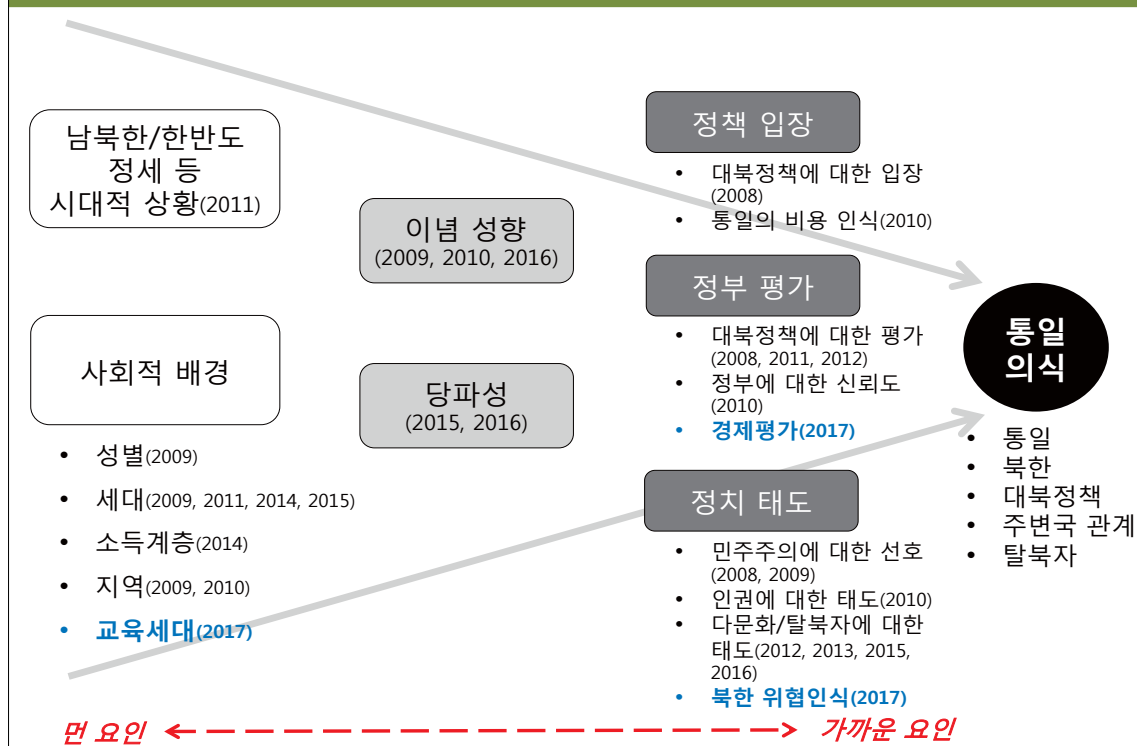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2017 통일의식조사 개요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지난 10년 간의 통일의식조사 분석틀 (인과성 짚때기)



2017 통일의식조사 진행 경과

시기	내용
1월	2017 통일의식조사 집필진 구성
2월	조사사업 품질 진단 및 개편 방안 자문(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3월	설문지 개선 작업 진행(31일 관련 회의 개최)
4월	서울대학교 IRB(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5월	한국갤럽 측과 조사방법 개선 논의(18일 관련 회의 개최)
7월	7월 3일 ~ 28일 (26일간) 설문 진행
8월	설문조사 결과 산출 및 집필진 송부 2016 통일의식조사 영문판 출간(2016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9월	조사결과 발표세미나 개최(9.27)

2017 통일의식조사 기본 내용

< 표본 >

-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 표본크기: 1,200명 (유효표본)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 표본오차: $\pm 2.8\%$ (95% 신뢰수준)

< 조사 방법 >

-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조사기간: 2017년 7월 3일 ~ 7월 28일 (26일간)
- 가중치: 시/도별(16개), 성별(2개), 연령별(5개)로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 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분석하였음

통일에 대한 인식

송영훈 (강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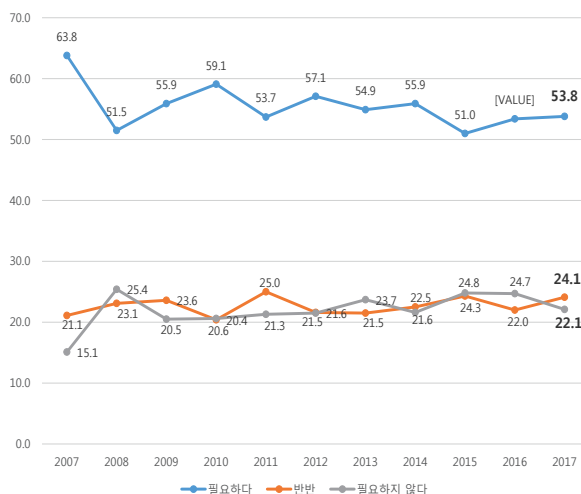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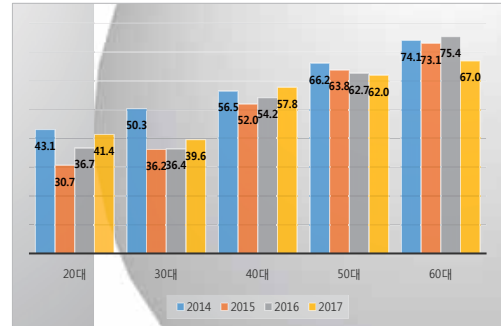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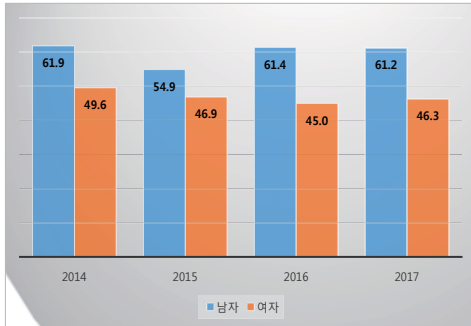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의 필요성



- 매우 필요 16.5, 약간 필요 37.3 → 53.8
-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간 증가하였지만,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 연속해서 20%가 넘지 않았음
- 북한주민의식조사: ‘매우 필요하다’=95.5%
- 결국 전반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통일교육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음.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유형이 정형화되어서 외부의 새로운 정보의 유입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닐 개연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

통일의 필요성 (2)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20대와 30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50대와 60대의 인식과 차이가 있음.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간 인식의 차는 해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수도권 지역에서 증가하고 충청과 영남권에서 낮았음
- 2017년 수도권 지역은 54.5→53.4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충청권에서의 응답은 61.4%로 호남권과 함께 가장 높았음.

통일의 필요성 * 대통령 후보/지지정당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타 후보	99	
매우 필요하다	18.60%	18.30%	18.40%	23.20%	17.30%	12.50%	14.40%	18.20%
약간 필요하다	36.90%	45.70%	22.40%	44.60%	36.50%	29.20%	36.70%	36.90%
반반/ 그저 그렇다	24.60%	18.90%	31.20%	17.90%	21.20%	33.30%	25.60%	24.20%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60%	14.30%	24.80%	14.30%	17.30%	20.80%	17.80%	17.30%
전혀 필요하지 않다	3.40%	2.90%	3.20%		7.70%	4.20%	5.60%	3.5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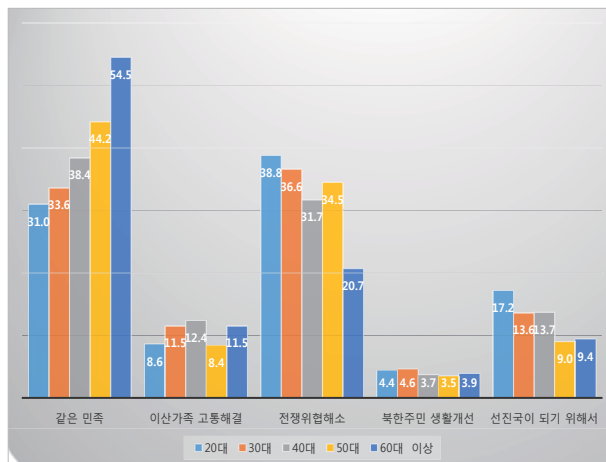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음	
매우 필요하다	21.80%	21.20%	13.00%	20.50%	10.30%	28.60%	14.00%	18.00%
약간 필요하다	37.30%	40.10%	31.50%	27.30%	37.90%	57.10%	34.50%	36.00%
반반/ 그저 그렇다	23.60%	20.40%	38.90%	27.30%	10.30%		26.00%	24.50%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80%	15.30%	14.80%	25.00%	27.60%		19.60%	17.30%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0%	2.90%	1.90%		13.80%	14.30%	6.00%	4.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합계
2007	50.7	8.9	19.2	1.8	18.7	0.7	1197
2008	58.7	6.6	14.5	2.9	17.2	0.1	1206
2009	44.3	8.5	23.5	4.2	18.7	0.8	1195
2010	43.3	7.0	24.2	4.0	20.8	0.6	1193
2011	41.9	7.2	27.3	4.8	17.7	1.1	1197
2012	46.0	9.1	25.3	4.4	14.5	0.8	1199
2013	40.4	8.3	30.8	5.5	14.2	0.8	1198
2014	42.1	9.1	27.0	3.9	17.6	0.3	1200
2015	40.7	12.3	26.3	6.3	14.0	0.4	1198
2016	38.6	11.8	29.8	5.0	14.2	0.7	1200
2017	40.3	10.5	32.5	4.0	12.5	0.2	1200

-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40.3%임.
- 2010년 이후 이 범주의 응답이 40% 전후로 큰 변동이 없음.
- “남북간의 전쟁위협 해소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7년에도 계속되는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해서 통일에 의한 긴장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을 수 있음.
- 민족적 당위성에 의한 통일론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통일론이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통일과 한국의 발전을 연계시키는 담론은 큰 반향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통일담론도 현실적 문제의 해결과 동떨어진다면 국민적 설득력이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통일의 이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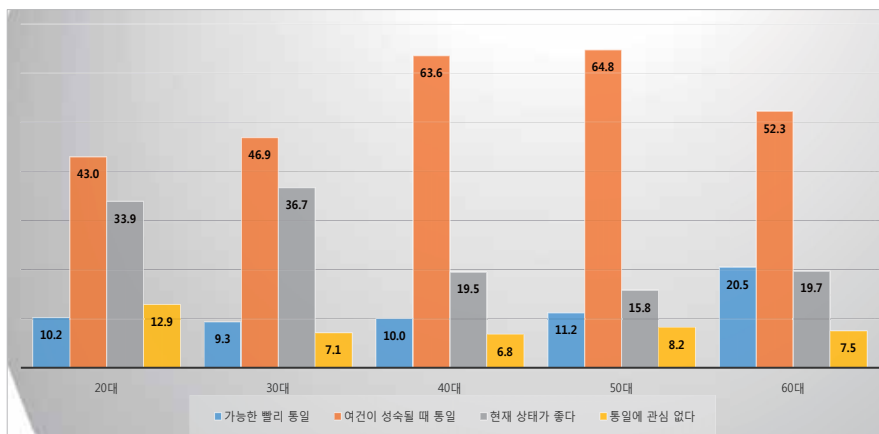
- 20대의 통일 이유 인식
- 전쟁위협해소 28.4%→38.8%
- 30대의 통일 이유 인식
- 전쟁위협해소 40.3%→36.6%
- 분단과 군사적 긴장고조는 결국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상정하게 됨을 시사함.
-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 있음.
- 북한주민의식조사: 같은민족(37.2), 북한주민 잘 살기(29.5), 북한의 선진국 도약(12.2)

통일 추진 방식

	어떠한 대가를 통일을 서두 치르더라도 가르기보다 여 능한 한 빨리 건이 성숙되 통일되는 것이 기를 기다려 좋다 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통일지상주의	점진적 통일	남북공존	통일무관심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6	64.8	17.1	8.5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7.0	16.1	6.9	1,200
2011	9.7	67.0	15.2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199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8	57.5	21.8	8.9	1,200
2016	13.1	54.1	23.2	9.6	1,201
2017	12.1	54.7	24.7	8.4	1,201

- 가능한 빠른 시일에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12.1%이며, 2013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
-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이 계속 줄어 들고 있음.
- 반면,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2007년 11.8%에서 2017년 24.7%로 증가하고 있음.
- 장기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두 체제의 정치적 통일만을 추구할 것인지, 경제, 문화, 사회, 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유형의 통일을 고민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통일당론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개연성도 있음.

통일 추진 방식 (2)



- 20대와 30대의 응답자들 중 "현재 상태가 좋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보다 월등히 많음.
- 40대와 50대, 60대에서도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을 하자는 응답이 많음.

통일 추진 방식 (3)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12.1	37.9	3.1	1.3
반반/그저그렇다	0.7	12.8	8.0	3.0
통일이 필요없다	0.1	4.0	12.9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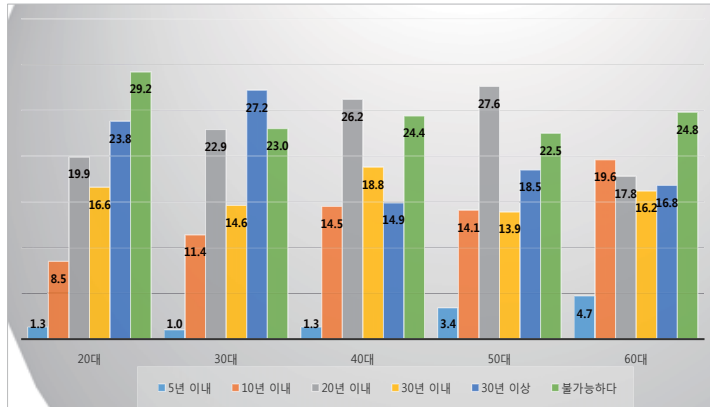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추진 방식에 대한 상관성이 높음.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점진적 통일을, 통일이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들은 남북공존을 가장 선호함.

통일가능시기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합계
2007	3.7	23.5	30.9	14.7	13.9	13.4	1,198
2008	2.3	13.4	22.3	14.8	25.1	22.1	1,213
2009	2.7	17.0	27.7	16.3	16.5	19.8	1,202
2010	3.4	17.8	24.1	13.4	20.8	20.6	1,200
2011	2.5	16.3	26.1	14.0	19.7	21.4	1,201
2012	2.9	14.5	25.9	17.8	19.8	19.2	1,200
2013	3.7	13.3	25.3	13.7	18.3	25.8	1,200
2014	2.2	13.7	22.8	18.2	19.7	23.5	1,200
2015	3.5	17.8	25.5	13.9	19.6	19.7	1,199
2016	3.5	14.0	25.1	15.2	17.9	24.4	1,201
2017	2.3	13.6	23.1	16.0	20.1	24.7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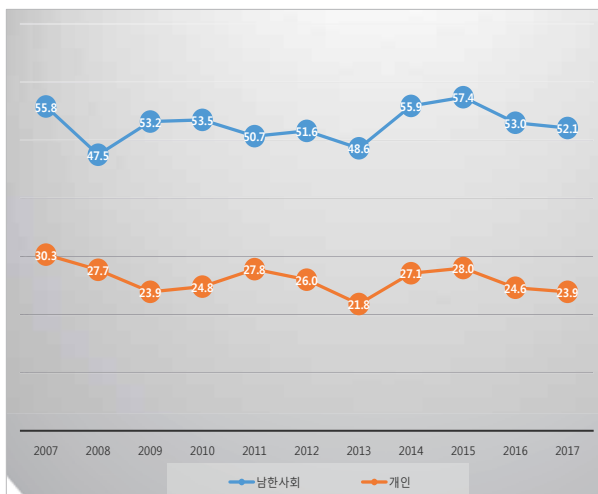
- 전통적으로 통일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일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 단기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 통일교육사업 등이 국민적들의 인식 변화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이 요구됨.

통일가능시기



- 2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40대와 50대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었지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매우 높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30년 이상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음
- 북한주민: 불가능하다(56.3), 10년이내(25.7) >>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통일 편익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 남한사회 전체에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응답이 52.1%인 반면,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응답은 23.9%임.
- 2015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두 범주 모두 줄어들었음.
- 2007년 이후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평균 26.5%p임.
- 2016년과 2017년 격차는 각각 29.4%p와 28.4%p 임.
- 북한주민: 북한에 이익(87.9), 개인(74.2)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 부동산투기, 빈부격차, 범죄문제 등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통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많지 않음
- 통일과 일자리 문제를 연결시키는 담론이 있지만, 국민들의 4명 중 1명만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통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 및 담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통일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이라는 **역사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 해결과 국제적 환경에 대응이라는 **현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성**이라는 세 측면을 고려해야함.
- 통일담론의 인식론적 다양성 확보가 요구됨.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19.9	20.0	19.3	18.1	19.7	23.6	23.6	27.0	23.0	23.8	26.9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31.3	23.5	31.2	29.8	25.1	24.8	26.1	23.2	29.1	26.1	27.2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48.7	56.6	49.5	51.9	55.3	51.7	50.3	49.8	48.0	50.1	46.3

-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국내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통일을 이뤄가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통일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들을 희생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을 것임.
- 결국 통일과 민주주의 완성론, 통일과 선진국 도약론은 부분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음.

북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8.7	34.3	37.6	38.7	34.7	39.9	38.2	28.7	36.3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7.8	33.5	29.4	32.0	33.0	27.0	33.3	27.8	32.5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3.6	32.2	33.0	29.3	32.3	33.1	28.5	43.6	31.1

- 통일과 북한의 민주화의 연계성에 대한 시각의 거의 삼분되어 있음.
- 북한 내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통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비슷함.
- 북한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으나 북한의 민주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임.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한의 현체제 유지	43.6	44.4	48.9	44.2	43.6	44.9	48.1	47.3	45.4
남북한체제의 절충	39.1	38.8	35.6	37.7	35.4	37.9	33.5	34.5	37.7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	13.3	12.6	12.3	15.1	16.9	13.2	13.6	14.4	13.5
어떤 체제도 무방	4.0	4.2	3.2	3.0	4.1	4.1	4.8	4.0	3.4

- 조사 기간 동의 항목별 응답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문항임.
- 한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평균 45%임.
- 2017년 남북한체제를 절충하자는 의견은 37.7%임.
-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인 통일단계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단계에서 인식의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 북한주민의식조사: 남한(38.0), 상관없음(26.6), 절충(15.4), 북한(10.8), 공존(9.2)

논의 및 시사점

• 문재인 정부는 통일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여론과 대중의 인식이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제한된 영향력을 가짐
- 그런데 지금까지의 축적된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급변하지 않고 있음.
-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통일의식 개선의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고, 남북간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이러한 접근을 활용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국민들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 국민들이 저마다 다른 통일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일 관련 인식의 일관성과 경향성을 보여줌
- 국민들은 통일을 더 이상 당위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음
- 통일의 과정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일을 이루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통합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논의 및 시사점 (2)

• 통일담론의 인식론적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에게 묻는 ‘통일’은 무엇인가? 조사의 특성과 목적에 의해 통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통일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층적 수준에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는 통일의식조사에서 진행되어야할 과제라기 보다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통일에 대해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임.
- 통일준비의 담론을 공론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여전히 통일의 가능시기를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탈북민들은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는가? 체제의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이 아닌 낮은 수준의 생활 담론 속에서 통일이 논의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현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없는 현실과 유리된 통일정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움

북한에 대한 인식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북한에 대한 인식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목차

I. 북한의 존재 인식

1. 한국인의 대북인식
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Ⅲ. 북한의 위협의식

1.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3.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4.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Ⅱ.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북한정권 신뢰도
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4.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Ⅳ.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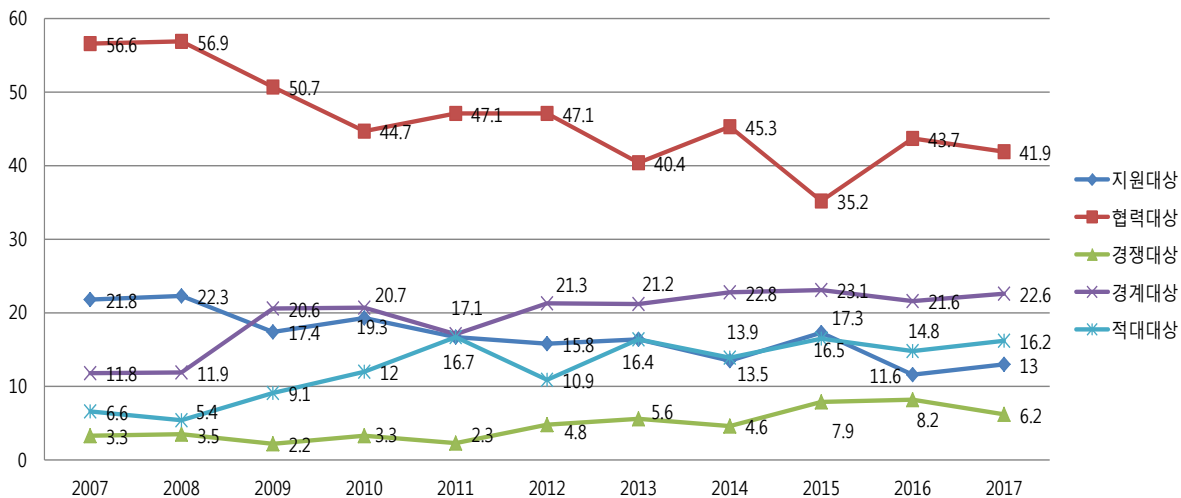
1. 북한사회 인지도
2.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V. 결론

I. 북한의 존재 인식

1. 한국인의 대북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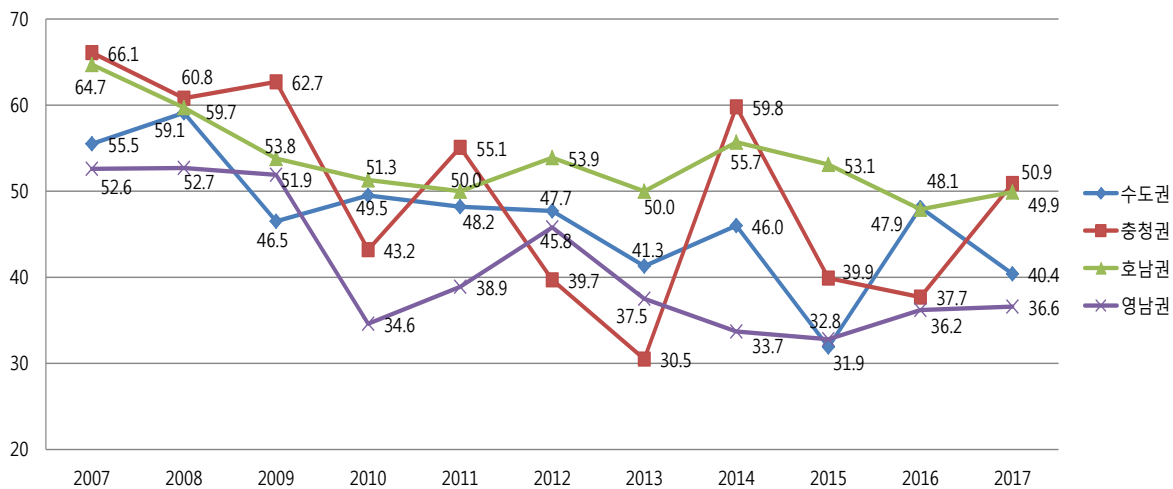


- 북한을 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소폭 상승하였음.
-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소폭 하락하였음.
- 그러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음.

1

I. 북한의 존재 인식

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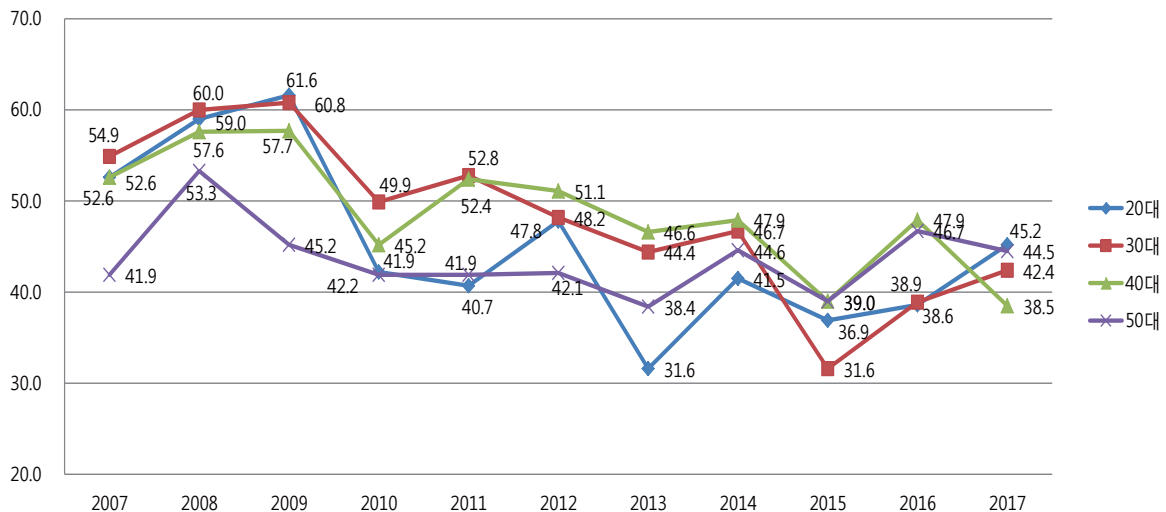


-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상승하였음.
- 수도권은 하락하였음.
- 영남권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큰 차이가 없음(2014년 이래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I. 북한의 존재 인식

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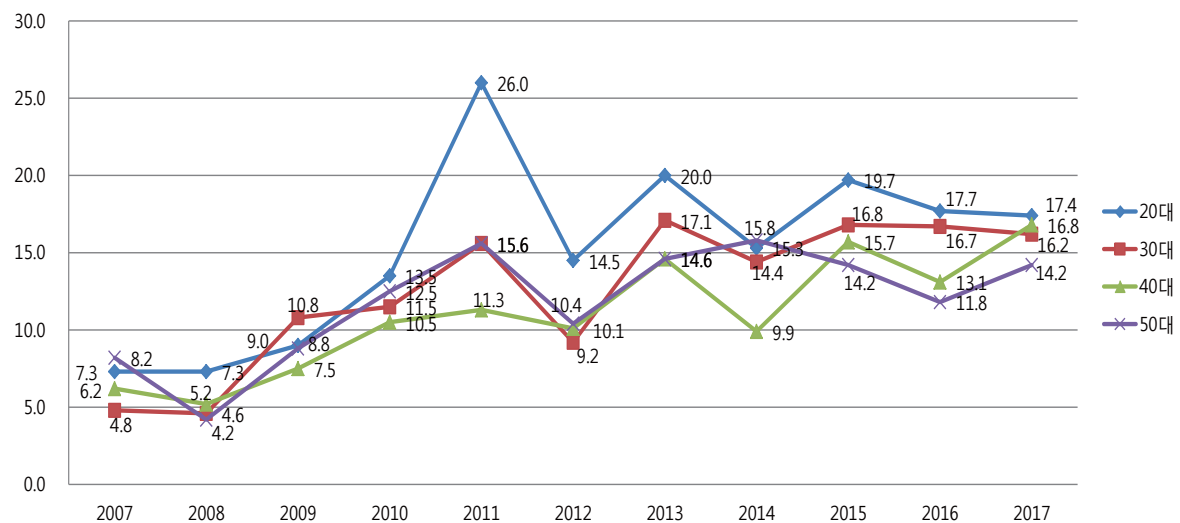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은 전년대비 40대와 50대에서 소폭 하락, 20대와 30대에서 소폭 상승.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45.2%', '30대 42.4%', '40대 38.5%', '50대 44.5%'로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됨.**

3

I. 북한의 존재 인식

3-1. ‘연령대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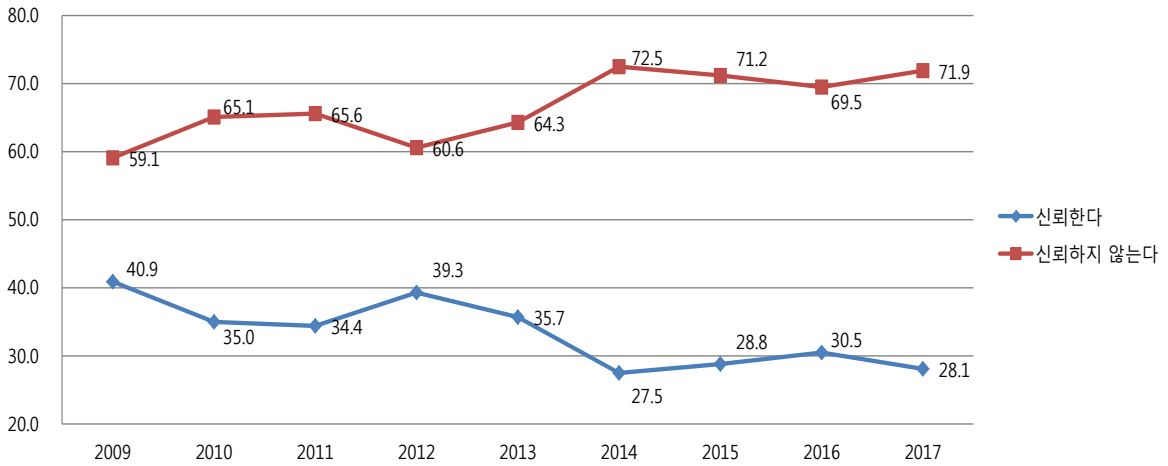
-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17.4%', '30대 16.2%', '40대 16.8%', '50대 14.2%'로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음'.**
- 그러나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임.

4

II.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북한 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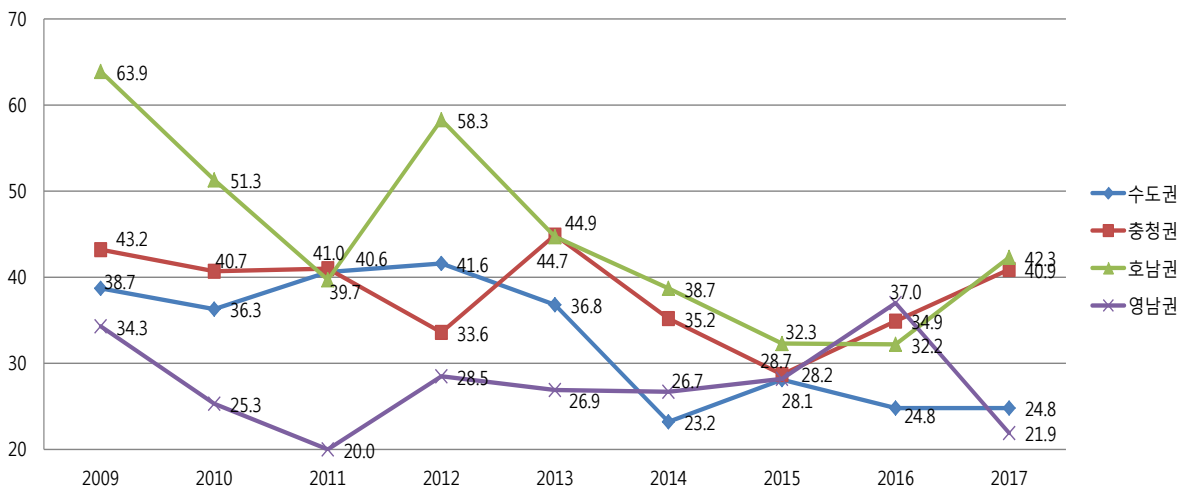


- 남한주민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

II.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2. ‘지역별’ 북한 정권 신뢰도: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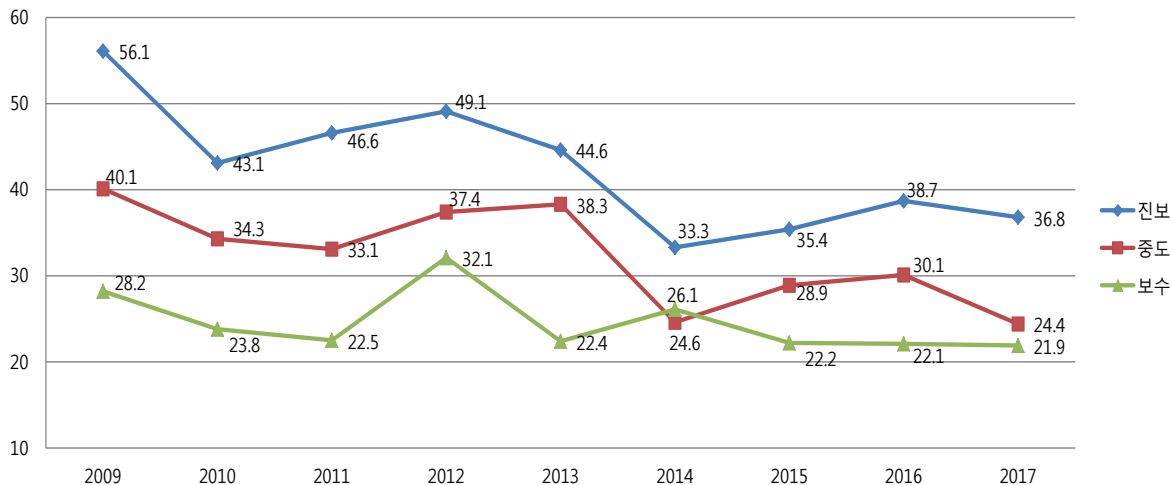


- 영남권이 21.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반면, 호남권은 4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충청권도 40.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15년에는 호남권 32.3%, 영남권 28.2%, 충청권 28.7%, 수도권 28.1%로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았음.
- 그러나 2017년 호남권과 충남권, 수도권과 영남권의 구도로 격차가 벌어졌음.

6

II.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3. ‘정치성향별’ 북한 정권 신뢰도: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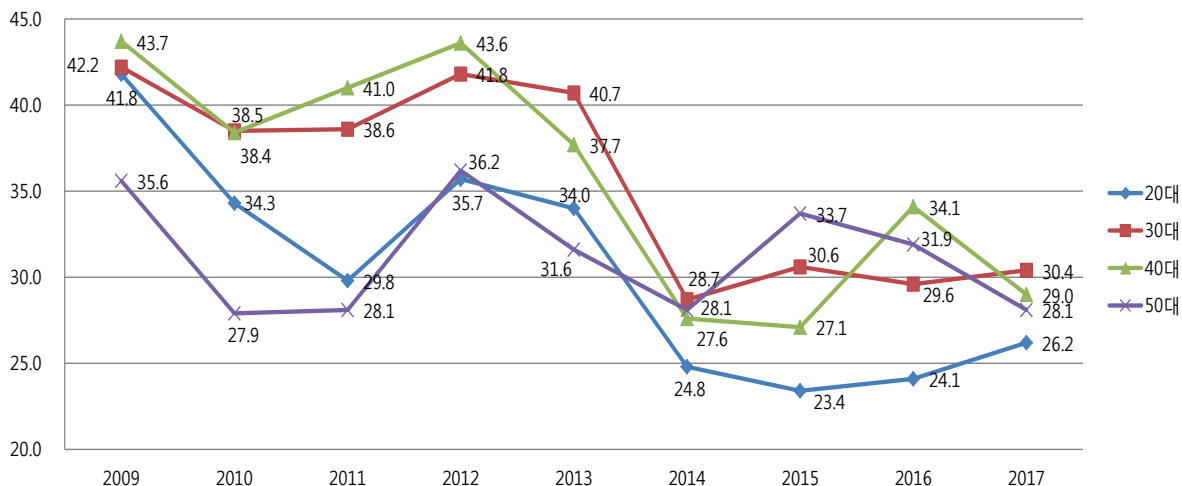


- 진보의 경우 30%대를 유지하며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남.
- 중도의 경우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보수는 20% 초반에서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7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4. ‘연령대별’ 북한 정권 신뢰도: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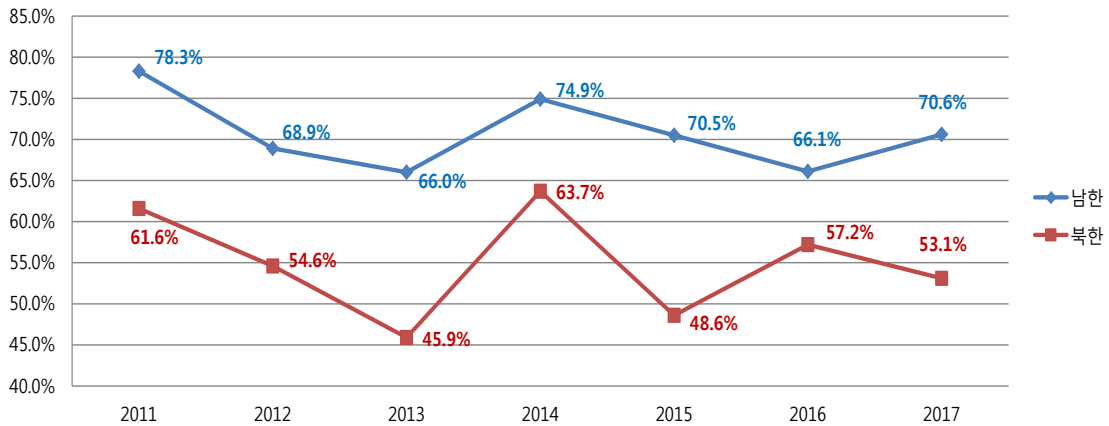


- ‘20대 26.2%’, ‘30대 30.4%’, ‘40대 29.0%’, ‘50대 28.1%’로 **‘3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2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대조됨.
- 특히, 2014년 이래로 20대의 북한정권 신뢰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8

Ⅲ. 북한의 위협 의식

1.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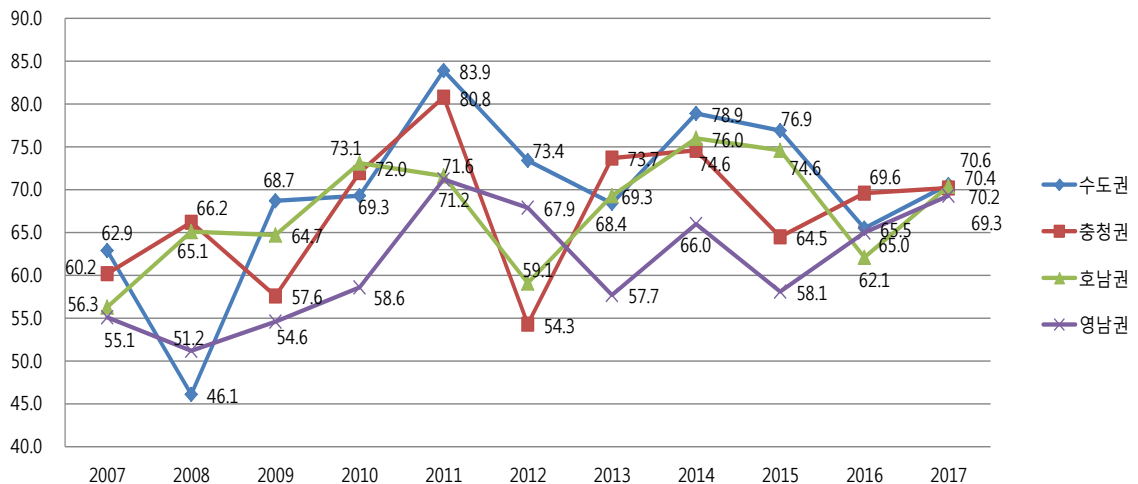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음.

9

Ⅲ. 북한의 위협 의식

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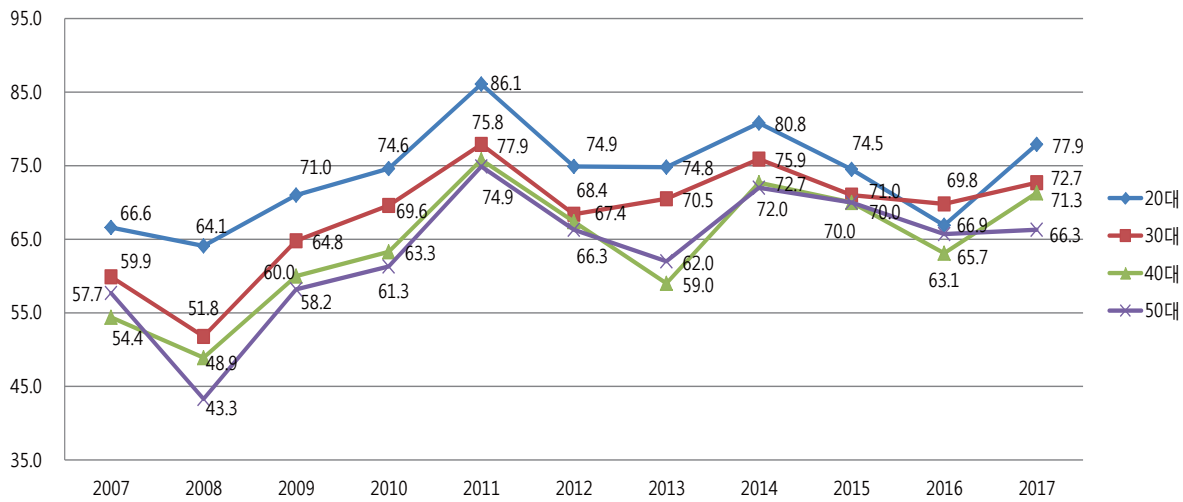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70%'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10

Ⅲ. 북한의 위협 인식

3.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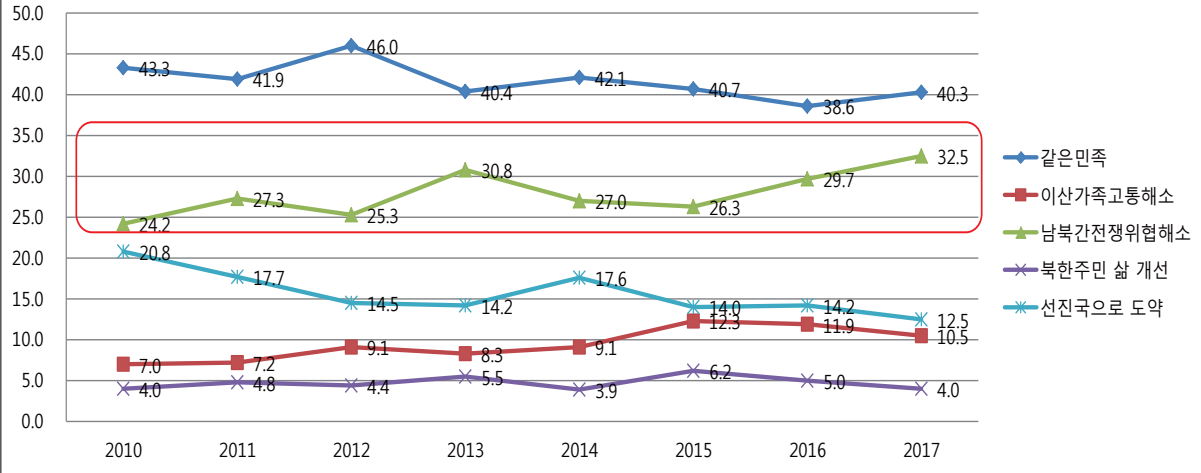
- 20~50대 모두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60%~70%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2016년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하였음.**

Ⅲ. 북한의 위협 인식

*통일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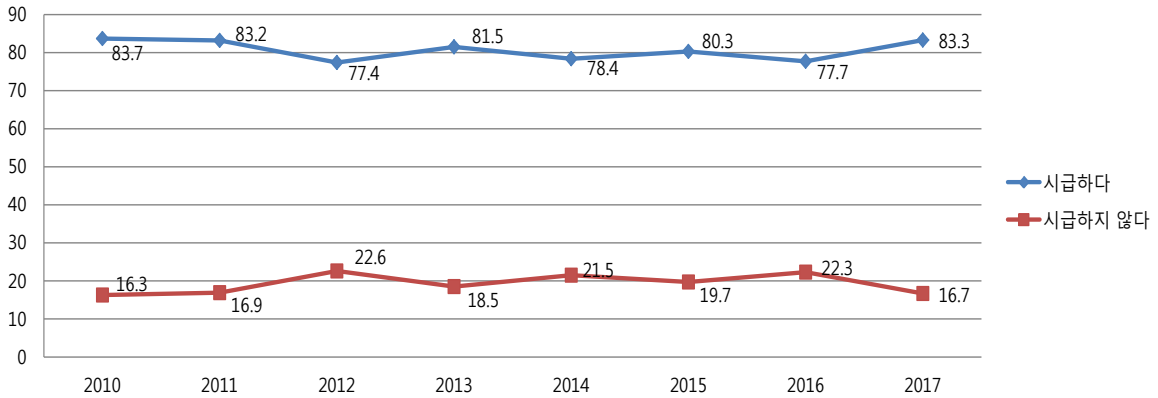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같은 맥락에서, 남한주민들은 통일의 목적 중 ‘남북간 전쟁 위협 해소’를 두 번째로 지목하고 있음.

Ⅲ. 북한의 위협 의식

***대북 사안 시급성 - 군사적 긴장 해소**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군사적 긴장 해소가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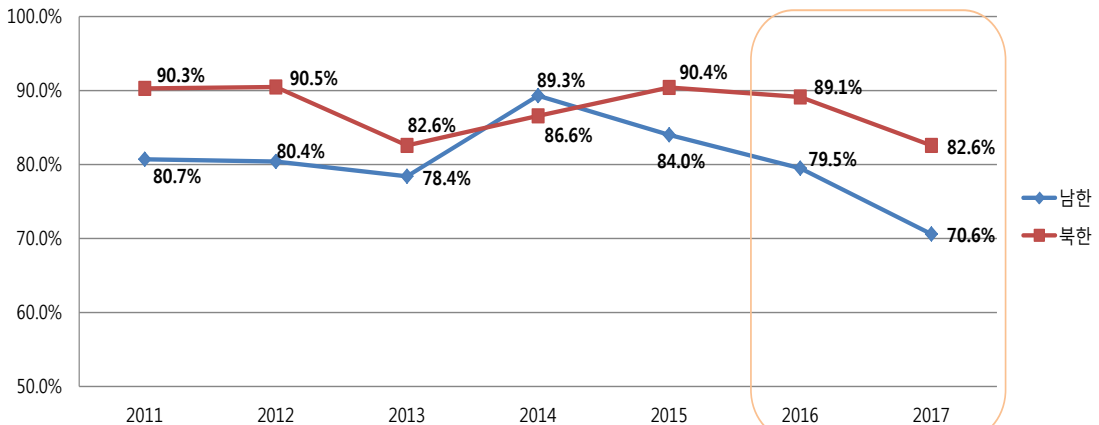


- 또한 남한주민들은 대북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지목하고 있음.

13

Ⅲ. 북한의 위협 의식

4.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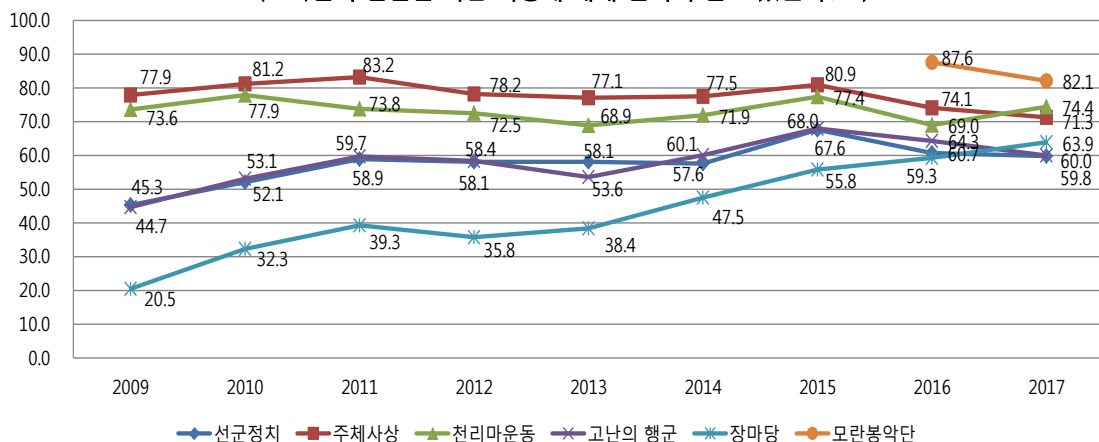
-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그 이유는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한 협상용이라고 개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음.
-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정권의 대북 협상 및 높은 대화 의지에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듯이, 기본적으로 남한주민은 북한 핵보유에 대해 높은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음.

14

IV.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선군정치(59.5%), 주체사상(71.3%), 천리마운동(74.4%), 고난의 행군(60.0%), 장마당(63.9%), 모란봉악단(82.1) 등 남한주민은 북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매체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 및 정보의 노출 빈도가 높아졌고 또 쉽게 접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5

IV.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2.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7)

(“남북한 간에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남한	북한	격차
선거방식	91.8%(1)	97.0%(1)	5.2%p(6)
언어사용	82.5%(3)	90.9%(3)	8.4%p(5)
생활풍습	77.1%(4)	96.2%(2)	19.1%p(2)
가족중시	57.3%(6)	86.4%(4)	29.1%p(1)
사회복지	90.5%(2)	80.3%(5)	10.2%p(4)
돈에 대한 중시	62.2%(5)	81.1%(6)	18.9%p(3)
평균	76.9%	88.6%	11.75%p

- 남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고 있음.
- 남한주민은 ‘선거방식’을 북한과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지목했고, ‘가족중시’를 가장 차이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16

IV. 결론

- 2017년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소폭 상승하였음.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대체로 30~50%를 유지하고 있음.
- 남한주민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를 살펴보면, 20대 26.%, 30대 30.4%, 40대 29.0%, 50대 28.1%로 '3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됨.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및 핵보유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음.
- 선군정치(59.5%), 주체사상(71.3%), 천리마운동(74.4%), 고난의 행군(60.0%), 장마당(63.9%), 모란봉악단(82.1) 등 남한주민은 북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남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 크다고 느끼고 있음.

17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1. 북한의 존재인식

1) 한국인의 대북 인식

-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이 소폭 상승하였음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 이다(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2016년 14.8%에서 2017년 16.2%로 소폭 상승했음
 - 동시에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2016년 14.8%에서 2017년 16.2%로 상승했음
 - 하지만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협력대상)’라는 응답은 2016년 43.7%에서 2017년 41.9%로 소폭 감소했음

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상승했음
 - 수도권은 2015년 31.9%에서 2016년 48.1%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17년 40.4%로 전년대비 ‘7.7%p’ 감소하였음
 - 반면, 충청권은 2015년 39.9%에서 2016년 37.7%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 50.9%로 ‘13.2%p’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음
 - 호남권은 2015년 53.1%에서 2016년 48.1%로 하락했다가 2017년 49.9%로 ‘1.8%p’ 상승했음
 - 영남권은 2015년 32.8%에서 2016년 36.2%, 2017년 36.6%(전년대비 +0.4%p)로 상승했음

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은 220대와 30대에서 상승했고, 40대와 50대는 하락했음
 - 20대의 경우 2015년 36.9%에서 2016년 38.6%, 그리고 2017년 45.2%로 전년대비 ‘6.6%p’ 상승했음
 - 30대의 경우 2015년 31.6%에서 2016년 38.6%, 2017년 42.4%로 전년대비

‘3.8%p’ 상승했음

- 2015년 이래로 20대와 30대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상승세에 있음
- 반면, 40대의 2015년 39.0%에서 2016년 47.9%로 상승했다가 2017년 38.5%로 전년대비 ‘9.4%p’ 감소했음
- 50대의 경우도 2015년 39.0%에서 2016년 46.7%로 상승했다가 2017년 44.5%로 전년대비 ‘2.2%p’ 감소했음
- 한편,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30대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40대와 50대는 증가했음
- 40대의 경우 2016년 13.1%에서 2017년 16.8%로 ‘3.7%p’ 증가했음
- 50대의 경우 2016년 11.8%에서 2017년 14.2%로 ‘2.4%p’ 증가했음

2.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북한정권 신뢰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

-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여전히 높게 측정되고 있음
 -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정권 신뢰도 질문에서 70%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음
 -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2014년 72.5%, 2015년 71.2%, 2016년 69.5%로 감소하다가 2017년 71.9%로 상승했음
 -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은 2009년 59.1% 이래로 꾸준히 상승했음

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영남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호남권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음.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충청권의 경우 2016년 34.9%에서 2017년 40.9%로 ‘6.0%p’ 상승했음
 - 호남권의 경우 2016년 32.2%에서 2017년 42.4%로 ‘10.2%p’ 상승했음
 - 수도권은 2017년 24.8%로 전년과 같았음
 - 반면, 영남권의 경우 2016년 37.0%에서 2017년 21.9%로 ‘15.1%p’ 큰 폭으로 하락했음

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 진보, 중도, 보수 등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정권 신뢰도가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음
 - 진보적 정치성향의 경우 2014년(33.3%)이래로 2016년(38.7%)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36.8%로 전년대비 '1.9%p' 소폭 하락하였음
 - 중도의 경우도 2014년(24.6%)이래로 2016년(30.1%)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24.4%로 전년대비 '5.7%p' 하락하였음
 - 한편, 보수적 정치성향은 2014년 26.1%에서 2015년 22.2%로 소폭 하락한 이후 2017년 21.9%(전년대비 -0.2%p)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상승한 반면, 40~50대에서는 하락하였음
 - 20대의 경우, 2015년 23.4%에서 2016년 24.1%, 그리고 2017년 26.2%로 전년대비 '2.1%p' 소폭 상승했음
 - 30대의 경우, 2014년 28.1%에서 2015년 30.6% 소폭 상승한 이래로 2016년 29.6%, 2017년 30.4%(전년대비 +0.8%p)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40대의 경우, 2015년 27.1%에서 2016년 34.1%로 크게 상승한 이후 2017년 29.0%로 '5.1%p' 소폭 하락했음
 - 50대의 경우, 2015년 33.7%로 같은 시기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가 2016년 31.9%, 2017년 28.1%(전년대비 -3.8%p)로 30대(30.4%)~40대(29.0%)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

3. 북한의 위협 인식

1)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음
 - 2014년 74.9%에서 2015년 70.5%, 2016년 66.1%로 하락하다가 2017년 70.6%로 전년대비 '4.5%p' 상승했음
 -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도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2016년 57.2%, 2017년 53.1%로 '4.1%p' 하락했음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승한 이유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강대강' 북미대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위협 인식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전년대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지역 모두 상승했음
 - 수도권의 경우, 2016년 65.5%에서 2017년 70.6%로 '5.1%p' 상승했음
 - 충청권의 경우, 2016년 69.6%에서 2017년 70.2%로 '0.6%p' 상승했음
 - 호남권의 경우, 2016년 62.1%에서 2017년 70.4%로 '8.3%p' 상승했음
 - 영남권의 경우, 2016년 65.0%에서 2017년 69.3%로 '4.3%p' 상승했음

3) 연령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연령대별 위협 인식도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50대를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모두 상승했음
 - 20대의 경우, 2016년 66.9%에서 2017년 77.9%로 '11%p' 상승했음
 - 30대의 경우, 2016년 69.8%에서 2017년 72.7%로 '2.8%p' 상승했음
 - 40대의 경우, 2016년 63.1%에서 2017년 71.3%로 '8.2%p' 상승했음
 - 50대의 경우, 2016년 65.7%에서 2017년 66.3%로 큰 변화 없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게 측정되는 것처럼 남한주민은 통일 이유에 대해 '남북간 전쟁 위협 해소'를 높게 지목하고 있음(2015년 26.3% → 2016년 29.7% → 2017년 32.5%)
 - 같은 맥락에서 남한주민은 대북 문제 해결에서 시급성이 높은 문제 중 하나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지목하고 있음(2015년 80.3% → 2016년 77.7% → 2017년 83.3%)

4)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은 2014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014년 남한주민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89.3%가 위협적이라고 보았음
 -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2015년 84.0%, 2016년 79.5%, 2017년 70.6%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남한주민의 대북 위협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북핵이 체제생존을 위한 협상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음
 -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정권의 대북 협상 및 높은 대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듯이 남한주민은 북한 핵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높은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음

4.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음
 - ‘장마당’의 경우, 2016년 59.3%에서 2017년 63.9%로 ‘4.6%p’ 소폭 증가했음
 - 특히, 장마당의 경우 2012년 35.8%에서 2013년 38.4% → 2014년 47.5% → 2015년 55.8% → 2016년 59.3% — 2017년 63.9%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 ‘천리마운동’의 경우, 2016년 69.0%에서 2017년 74.4%로 ‘5.4%p’ 상승했음
 - 반면, ‘주체사상’의 경우 2016년 74.1%에서 2017년 71.3%로 ‘2.8%p’ 소폭 하락했음
 - ‘고난의 행군’ 경우도 2016년 64.3%에서 2017년 60.0%로 ‘4.3%p’ 소폭 하락했음
 - 그리고 2016년(87.6%) 첫 조사 항목인 ‘모란봉악단’의 경우 2017년 82.1%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나 다른 항목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선군정치의 경우, 2016년 60.7%에서 2017년 60.0%로 큰 변화가 없었음

2)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 남한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과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남한주민’들은 ‘선거방식(91.8%)’, ‘언어사용(82.5%)’, ‘생활풍습(96.2%)’, ‘가족중시(86.4%)’, ‘사회복지(80.3%)’, ‘돈에 대한 중시(62.2%)’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음
 - ‘북한주민’들은 ‘선거방식(97.0%)’, ‘언어사용(90.9%)’, ‘생활풍습(96.2%)’, ‘가족중시(86.4%)’, ‘사회복지(80.3%)’, ‘돈에 대한 중시(81.1%)’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음
 - 하지만 남한주민(평균 76.9%)이 북한주민(평균 88.6%)보다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해 다소 낮게 느끼고 있음
 -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느끼는 이질감 중 ‘가족중시(29.1%p)’가 가장 격차가 컸고, ‘선거방식(5.2%p)’에서 가장 격차가 낮게 나왔음
 - 한편, 북한주민이 느끼는 남북한 이질감은 ‘선거방식(97.0%)’ 가장 컸고, ‘사회복지(80.3%)’가 가장 낮았음
 - 남한주민이 느끼는 남북한 이질감은 북한주민과 마찬가지로 ‘선거방식(91.8%)’에서 가장 크게 나왔고, ‘가족중시(57.3%)’에서 가장 낮았음

5. 결론

- 2017년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소폭 상승하였음

-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소폭 하락하였음
 - 그러나 2017년 기준 적대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16.2%인 반면, 협력대상 41.9%, 지원대상 13.0%임
 -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이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지역별 인식을 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영남권은 2014년 33.7% → 2015년 31.9% → 2016년 36.2% → 2017년 36.6%로 대체로 일정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대체로 30~50%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 인식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인식도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45.2%, 30대 42.4%, 40대 38.5%, 50대 44.5%로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됨.
 -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 17.4%, 30대 16.2%, 40대 16.8%, 50대 14.2%로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됨
 - 그러나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기본적으로 남한주민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영남권 21.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반면 호남권은 4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충청권도 40.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15년에는 호남권 32.3%, 영남권 28.2%, 충청권 28.7%, 수도권 28.1%로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았음
 - 그러나 2016년 호남권 32.2%, 영남권 37.0%, 충청권 34.9%, 수도권 24.8%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음
 - 이후 2017년 호남권과 충남권, 수도권과 영남권의 구도로 격차가 벌어졌음
- 이를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20-30% 수준에서 진보, 중도, 보수의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음
- 진보의 경우 30%대를 유지하며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남
 - 중도의 경우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는 20% 초반에서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 북한정권 신뢰도를 살펴보면, 20대 26.%, 30대 30.4%, 40대 29.0%, 50대 28.1%로 3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됨
 - 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2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대조됨
 - 특히, 2014년 이래로 20대의 북한정권 신뢰도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70%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20-50대 모두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60-70%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 인식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2016년과 비교할 때 2017년 현재 소폭 상승하였음
- 같은 맥락에서 남한주민들은 통일의 목적 중 ‘남북간 전쟁 위협 해소’를 두 번째로 지목하고 있음
 - 또한 남한주민들은 대북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군사적 긴장 해소를 지목하고 있음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6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이러한 인식은 새로운 정부 등장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2016년과 2017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그리고 북미 간 강대강 대결과 남북한 대화와 협력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선군정치(59.5%), 주체사상(71.3%), 천리마운동(74.4%), 고난의 행군(60.0%), 장마당(63.9%), 모란봉악단(82.1%) 중 남한주민은 북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매체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 및 정보의 노출 빈도가 높아졌고 또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남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고 있음
 - 남한주민은 선거방식을 북한과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지목했고, 가족중시를 가장 차이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북한주민도 선거방식을 남북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각하고 있음
 - 두 번째로는 생활풍습을 지목했고, 돈에 대한 중시를 가장 차이가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의식조사-대북정책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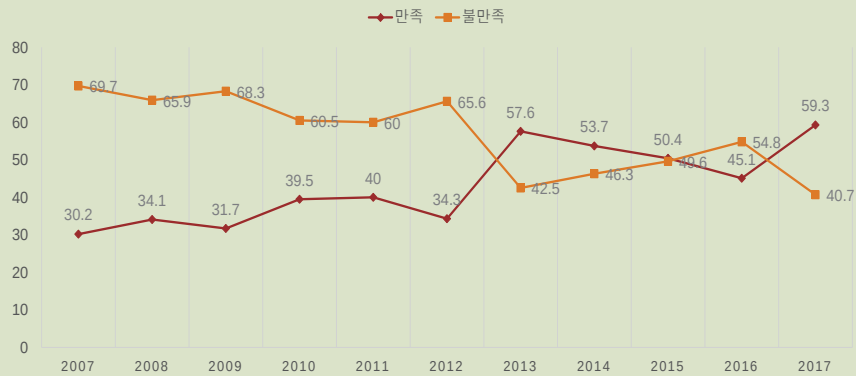
- 조사 개요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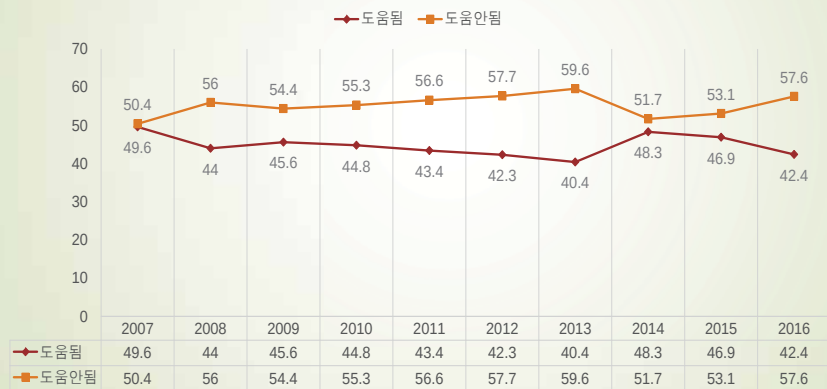
- 북핵 미사일의 도발로 한반도 전쟁설 등 위기감 고조
- 핵무기 개발과 병행하여 재래식 전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상황 일부 호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 대북정책의 실효성은?
-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방향/아젠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정부의 대북정책 아젠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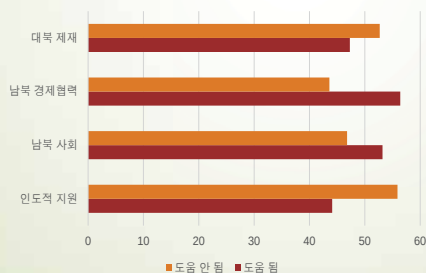


대북지원의 북한주민 생활 기여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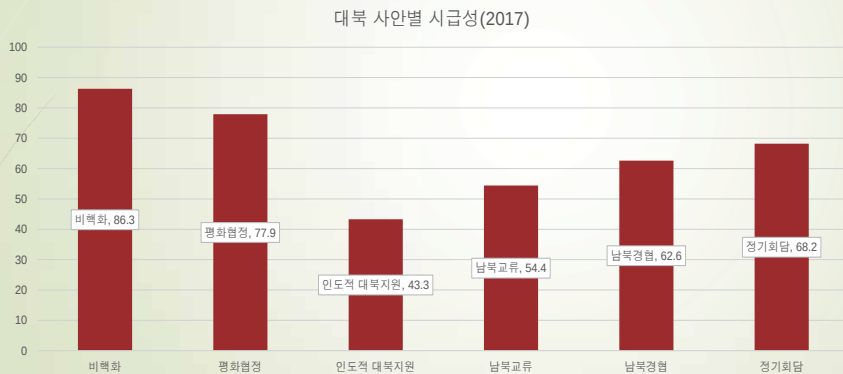
대북정책별 북한 개혁개방 효용성

대북정책별	인도적 지원	남북 사회문화 교류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
도움 됨	44.1	53.2	56.4	47.3
도움 안 됨	55.9	46.8	43.6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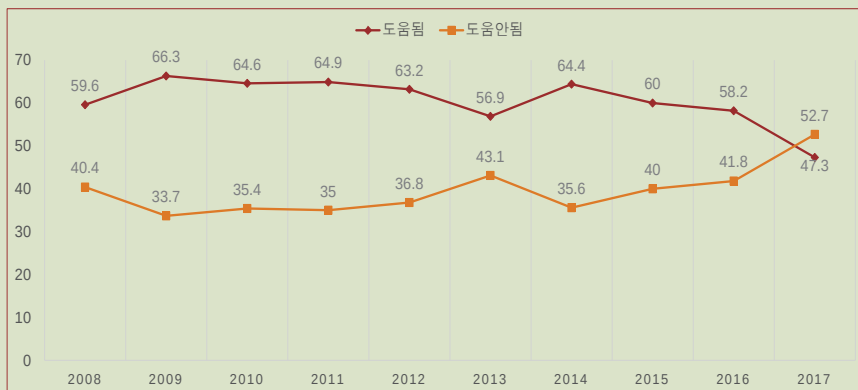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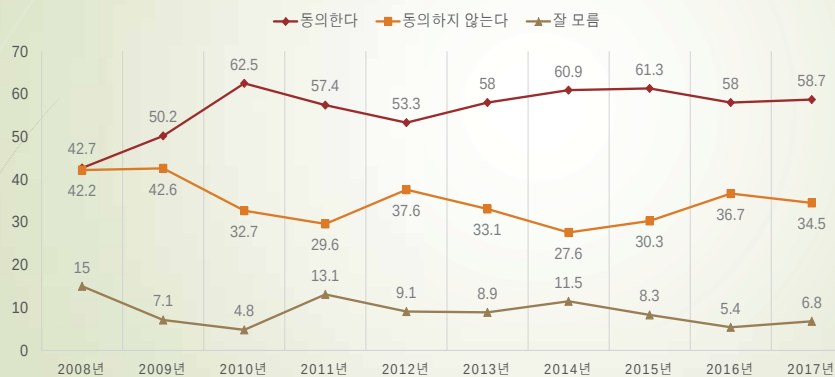
대북사안별 시급성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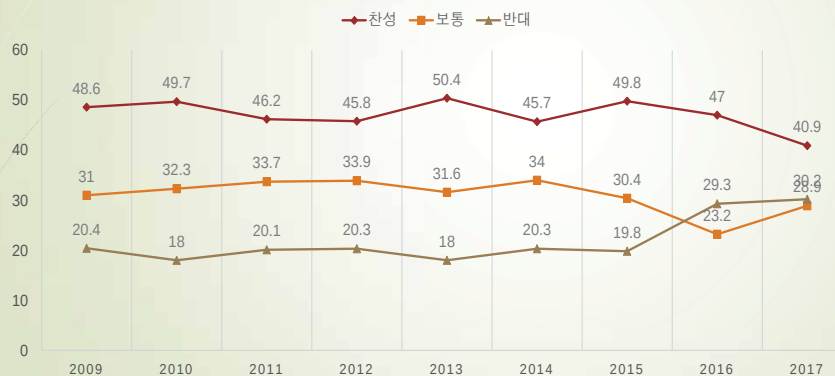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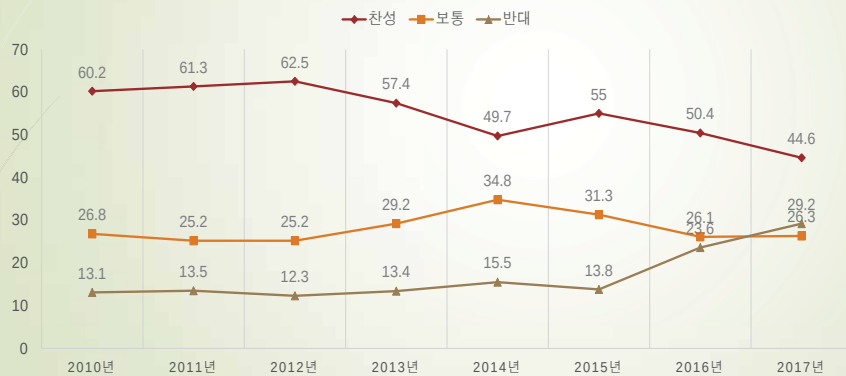
남북합의사항 계승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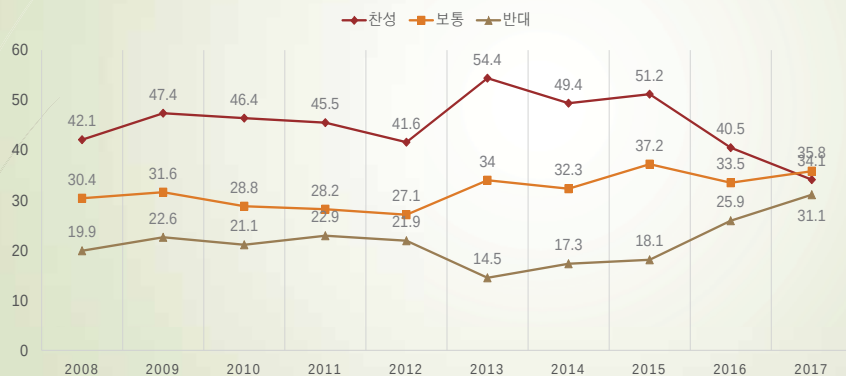
개성공단 유지/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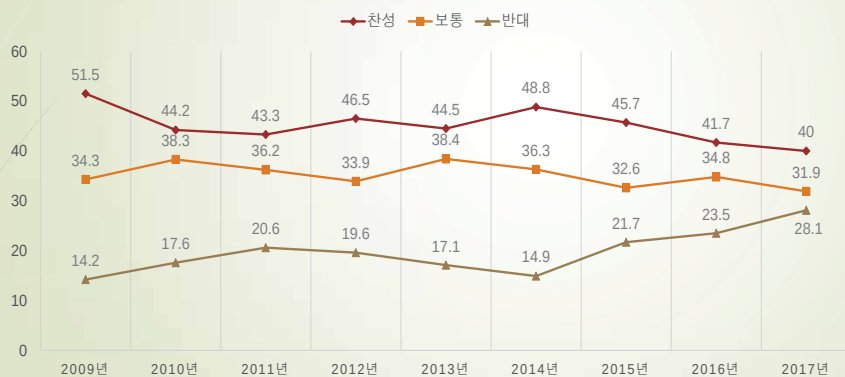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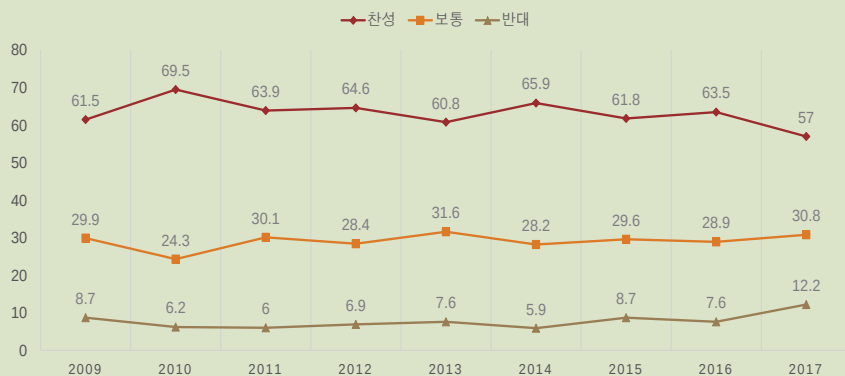
북핵 문제 해결 전 교류협력(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견해



대북 삐라 살포 중단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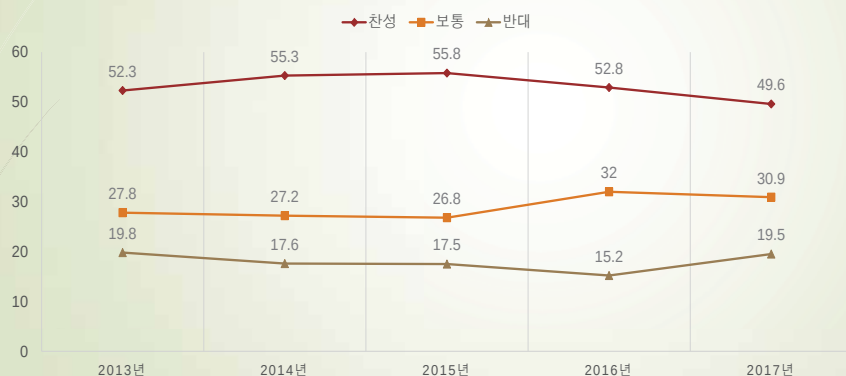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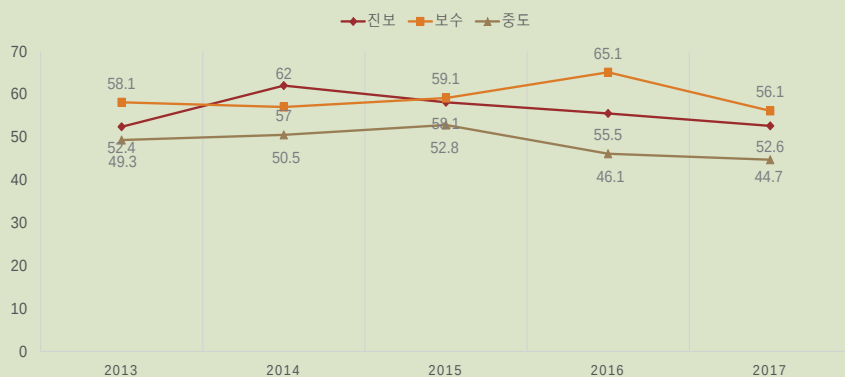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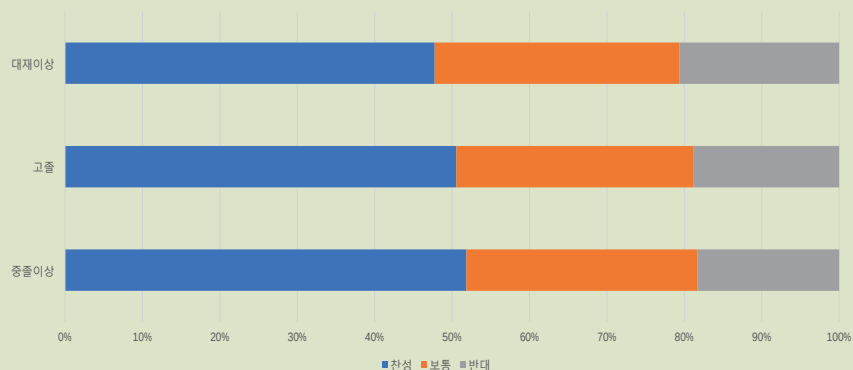
한국 핵무장 주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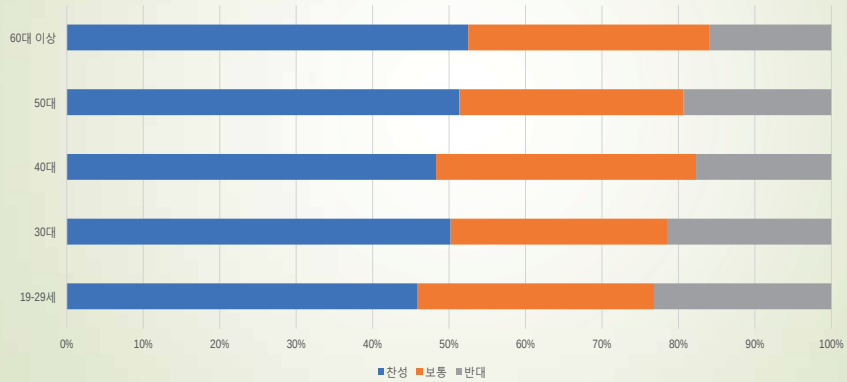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교육수준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연령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반 비율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 북핵 미사일의 도발로 한반도 전쟁설 등 위기감 고조
- 핵무기 개발과 병행하여 재래식 전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상황 일부 호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 대북정책의 실효성은?
-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방향/아젠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 2013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만족도가 2017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증가하여 59.3% 기록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하고, 통일대박론을 거쳐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점차 회의적이며 피로감 증대
-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효용성에 대해서도 점차 회의적
- 대북 제재나 인도적 지원보다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효용성을 갖는다고 생각
- 2017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증가한 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회의감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3.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해 비핵화(86.3%), 평화협정(77.9%), 정교회담(68.2%), 남북경협(62.6%), 남북교류(54.4%), 인도적 대북지원(43.3%)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을 때, 비핵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짐

- 다수가 일관되게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이 체결한 합의사항을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 약간의 부침이 있으나 주장 동의 비율이 60% 전후로 나타남. 기존 합의 존중을 원칙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
- 개성공단 유지/재개(2016년부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나, 2016년부터 반대의 응답도 증가하는 추세
-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북핵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찬성이 34.1%로 조사 이후 가장 낮음 응답 비율을 나타냄.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지지율이 높음에 따라, 대북 정책 아젠다에 공감하는 결과로 분석됨
- 대북 뼈라 살포 중단에 대해서는 찬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가 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직 주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에 감소하긴 하였으나,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60%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해 왔음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내정 간섭이라는 인식보다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 2017년에 미세하게 하락하긴 했으나, 2013년 조사 이후 50% 전후의 응답자들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
-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찬성을 보면 중도층에서 가장 낮고, 진보와 보수에서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음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높음
- 연령에는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60대 이상이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19-29세가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음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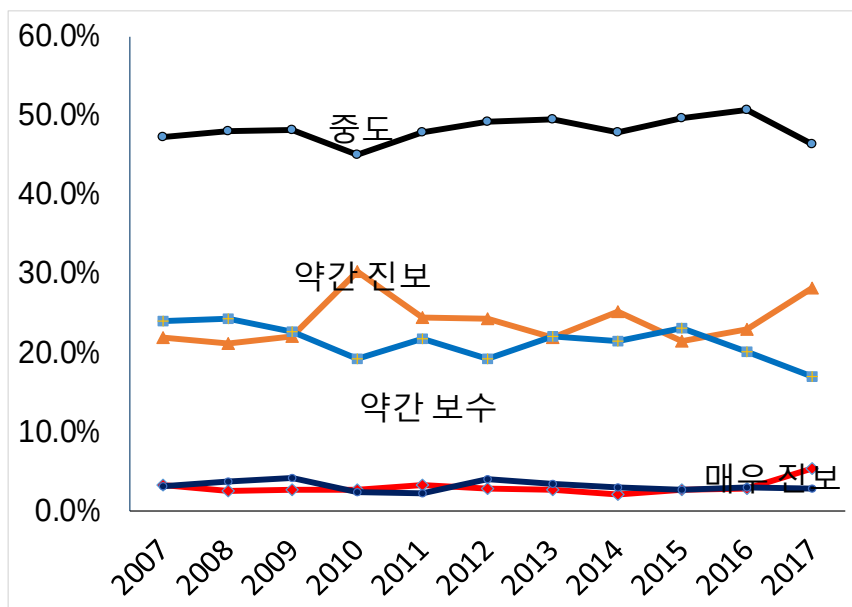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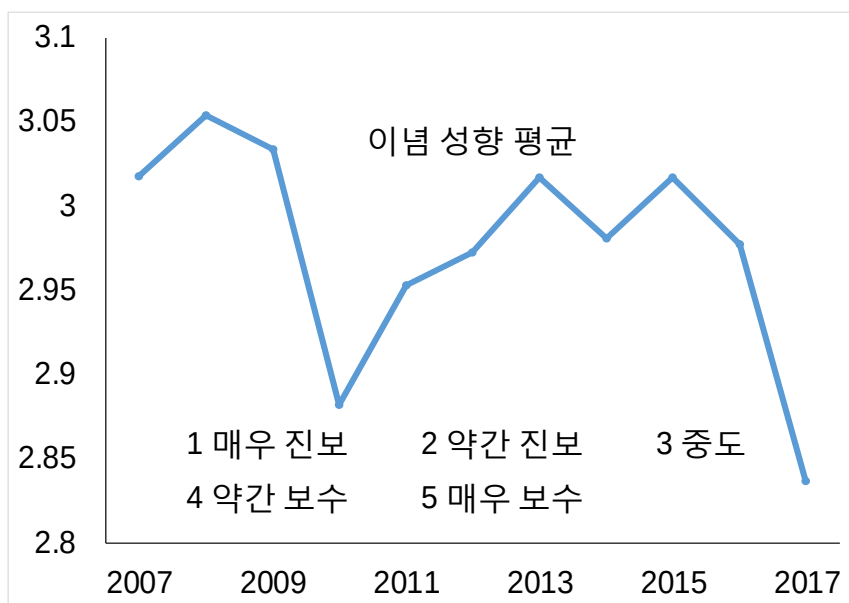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동준

한국 사회의 진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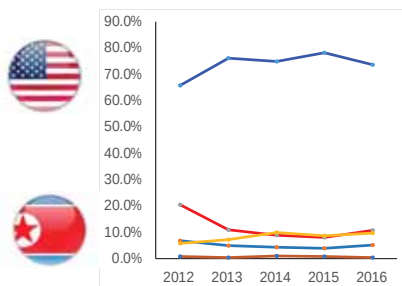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진보화 2



지지 정당의 변화

2016			2017		
더불어민주당	206	17.2%	더불어민주당	458	38.2%
새누리당	317	26.4%	자유한국당	137	11.4%
			바른정당	54	4.5%
국민의당	118	9.8%	국민의당	44	3.7%
정의당	13	1.1%	정의당	29	2.4%
기타			기타	7	0.6%
무당파	546	45.5%	무당파	470	39.2%
결측	0		결측	1	0.1%

주변국 친밀감



미국과 가장 높은 친밀도(69.2%)

북한과의 친밀도(14.9%)는 2순위

러시아와의 친밀도(0.1%)는 무의미 수준

미국과의 친밀도 하락 + 북한과의 친밀도 상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65.9%	76.2%	74.9%	78.3%	73.8%	69.2%
일본	6.8%	5.1%	4.3%	3.9%	5.2%	7.5%
북한	20.6%	11.0%	8.9%	8.1%	10.8%	14.9%
중국	5.8%	7.3%	10.0%	8.8%	9.7%	7.4%
러시아	0.9%	0.5%	1.0%	0.9%	0.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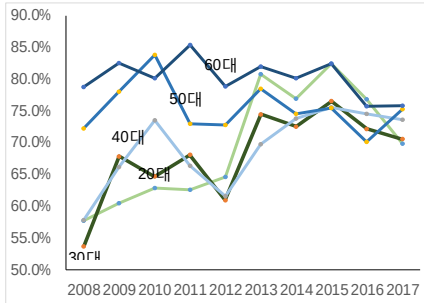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	1	1	1	1	1
북한	2	2	3	3	2	2
중국	3	3	2	2	3	3
일본	4	4	4	4	4	4
러시아	5	5	5	5	5	5

미국>북한>중국 순서가 전년도와 동일함.

- 미국: 10년 동안 친밀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약간 하락세
- 북한: 10년 동안 친밀감 2-3위. 2013년 위기 후 하락세.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후 상승세
- 중국: 10년 동안 친밀감 2-3위.

연령대별 미국과의 친밀감



50-60대 대미친밀감이 높음 +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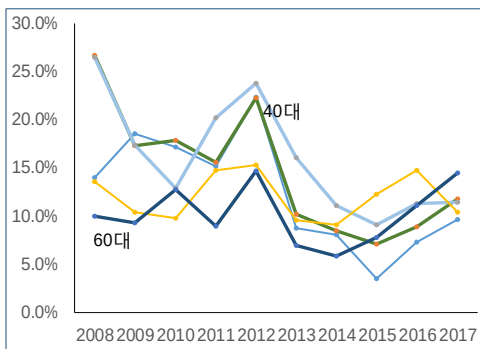
20-30대 대미친밀감 낮음 + 하락

‘386’ 세대의 노령화 vs. 정체성 유지

연령대간 수렴 현상? (장기 vs. 단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29세	57.7%	60.5%	62.9%	62.6%	64.6%	80.8%	77.0%	82.5%	76.9%	69.9%
30-39세	53.7%	67.9%	64.7%	68.1%	61.0%	74.5%	72.6%	76.6%	72.2%	70.6%
40-49세	57.8%	66.2%	73.6%	66.4%	61.6%	69.8%	73.8%	75.6%	74.6%	73.7%
50-59세	72.3%	78.1%	83.9%	73.0%	72.8%	78.5%	74.6%	75.5%	70.2%	75.3%
60대 이상	78.8%	82.6%	80.2%	85.4%	78.9%	82.0%	80.2%	82.5%	75.8%	75.9%

연령대별 북한과의 친밀감



20대 북한과의 친밀감이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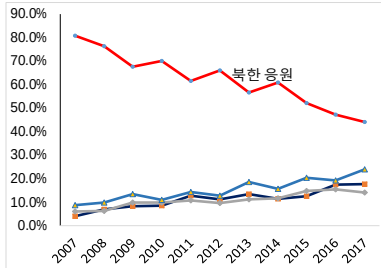
30대+ 비슷한 친밀도

전 연령대에서 북한과의 친밀감 상승

연령대간 수렴 현상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29세	14.0%	18.6%	17.2%	15.2%	22.4%	8.8%	8.1%	3.5%	7.3%	9.7%
30-39세	26.7%	17.3%	17.9%	15.6%	22.3%	10.2%	8.5%	7.1%	8.9%	11.8%
40-49세	26.5%	17.4%	12.9%	20.2%	23.8%	16.1%	11.1%	9.1%	11.3%	11.5%
50-59세	13.6%	10.4%	9.8%	14.8%	15.3%	9.6%	9.1%	12.3%	14.8%	10.4%
60대 이상	10.0%	9.3%	12.8%	9.0%	14.7%	7.0%	5.9%	7.8%	11.1%	14.5%

월드컵에서 미국과 북한이 경기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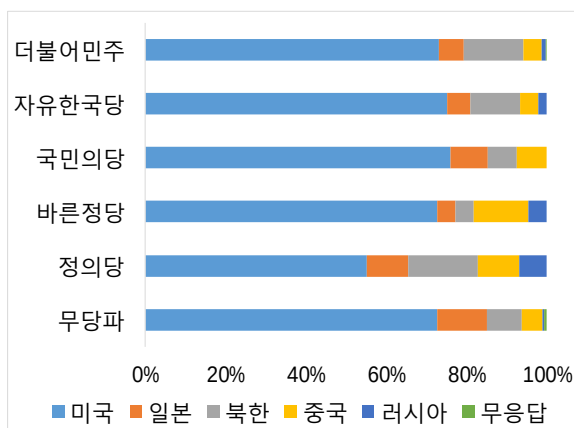
북한 응원이 역대 최저치 → 북한에 대한
친밀감 저하

미국 응원이 역대 최고치

중립(양팀 모두 응원 또는 응원하지 않음)이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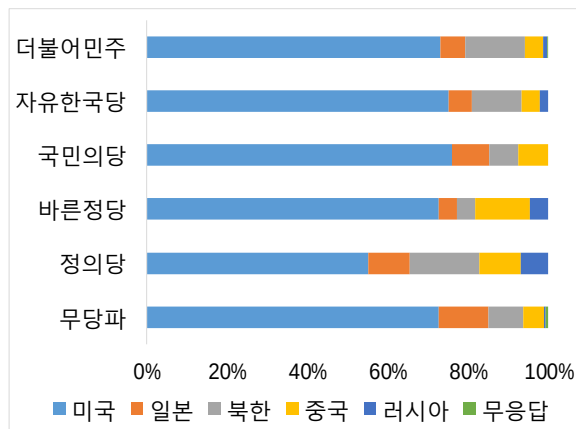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한	66.2%	56.7%	61.0%	52.2%	47.4%	44.2%
미국	11.3%	13.4%	11.6%	12.5%	17.5%	17.8%
양팀	9.8%	11.2%	11.7%	14.8%	15.6%	14.2%
응원X	12.8%	18.7%	15.7%	20.4%	19.4%	23.9%

지지 정당별 對美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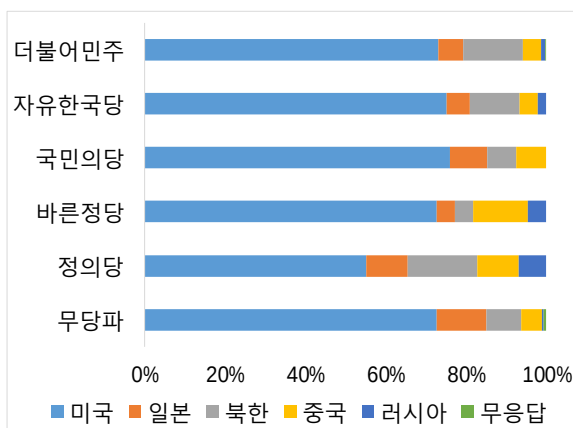
국민의당(75.9%) > 자유한국당(75.2%) > 더불어민주당(73.1%) >
무당파(72.8%) > 바른정당(72.7%) > 정의당(55.2%)

지지 정당별 對北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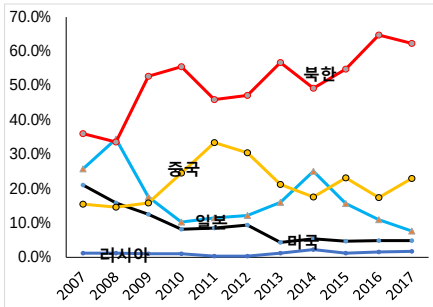
정의당(17.2%) > 더불어민주당(14.9%) > 자유한국당(12.4%) > 국민의당(7.4%) > 무당파(8.7%) > 바른정당(4.6%)

지지 정당별 對中 친밀감



바른정당(13.6%) > 정의당(10.3%) > 국민의당(7.4%) > 무당파(5.1%) > 더불어민주당(4.6%) > 자유한국당(4.4%)

평화위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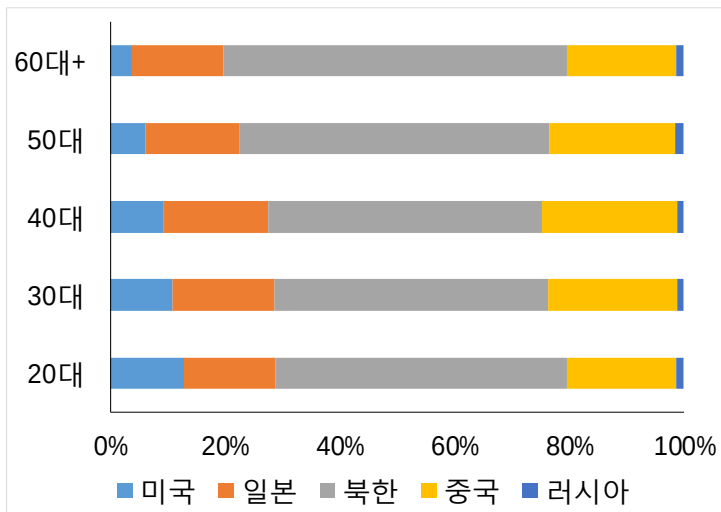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 인식(62.4%).
 목함지뢰 사건 후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감이 급증 → 남북관계에 따라 위협감
 변경

중국 위협이 2순위

일본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이 역대 최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9.5%	4.4%	5.5%	4.8%	5.0%	5.0%
일본	12.3%	16.0%	25.1%	15.8%	11.0%	7.8%
북한	47.3%	56.9%	49.3%	55.0%	64.8%	62.4%
중국	30.5%	21.3%	17.7%	23.3%	17.5%	23.0%
러시아	0.4%	1.3%	2.3%	1.3%	1.6%	1.8%
결측	0.0%	0.0%	0.1%	0.0%	0.1%	0.0%

연령별 평화위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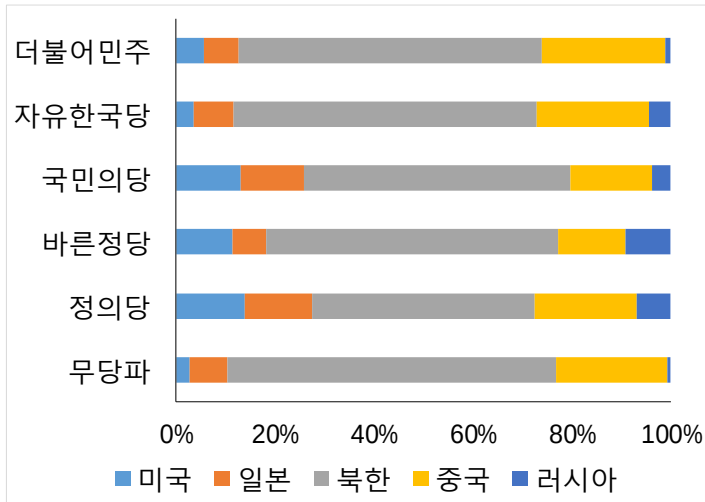


미국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이 연령에 따라 감소함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은 60대 > 50대 > 20대 > 30대 > 40대 순으로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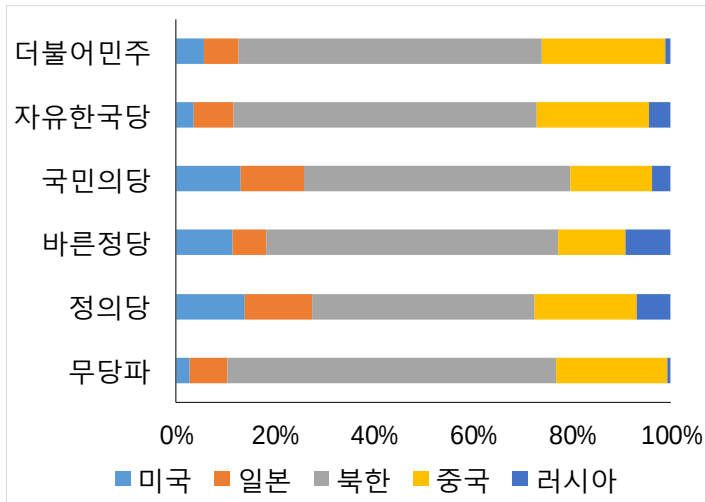
중국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은 40대 > 30대 > 50대 > 20대 > 60대 순으로 강함

지지 정당별 북한발 위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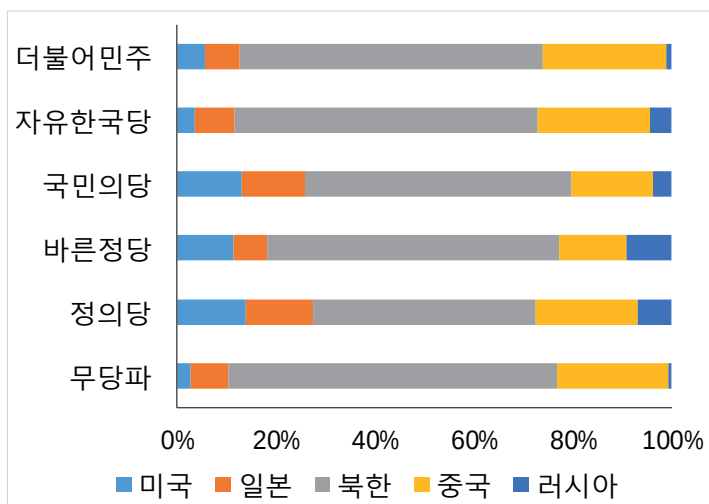
무당파(66.4%) > 더불어민주당(61.4%) > 자유한국당(61.3%) > 바른정당(59.1%) > 국민의당(53.7%) > 정의당(44.8%)

지지 정당별 미국발 위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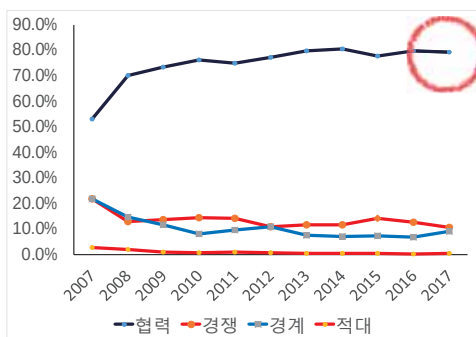
정의당(13.8%) > 국민의당(13.0%) > 바른정당(11.4%) > 더불어민주당(5.7%) > 자유한국당(3.7%) > 무당파(2.8%)

지지 정당별 중국발 위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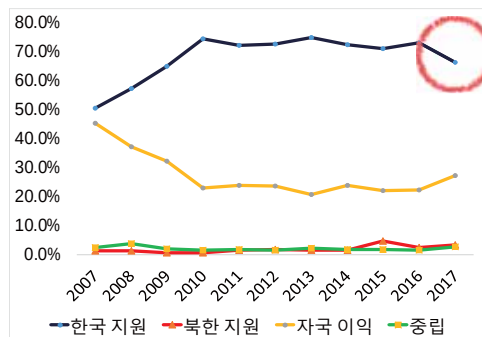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24.9%) > 자유한국당(22.6%) > 무당파(22.6%) > 정의당(20.7%) > 국민의당(13.6%) > 바른정당(13.6%)

대미인식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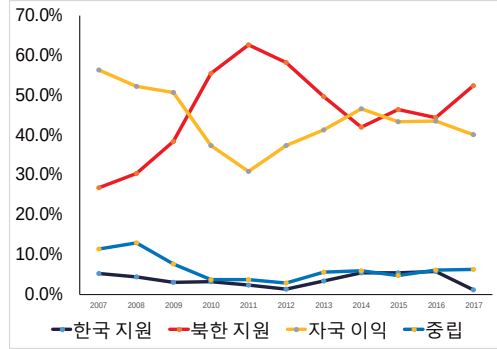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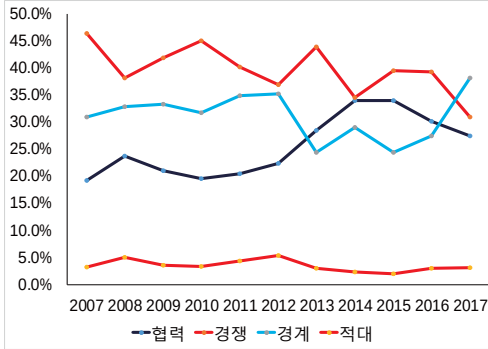
우방국, 동맹국, 협력자 이미지의 정형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66.5%가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

27.3%가 미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고 예상함

대중인식



경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38.3%로 가장 높으며, 경쟁대상 31.0%, 협력대상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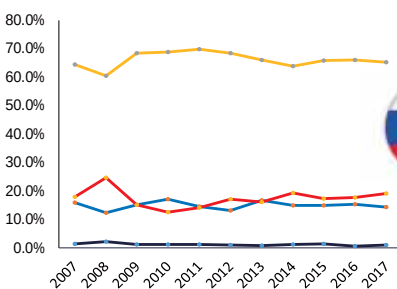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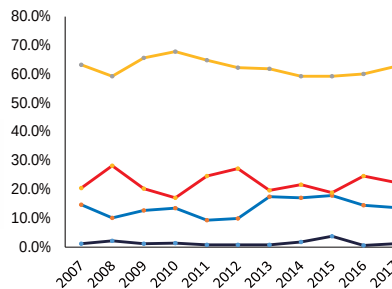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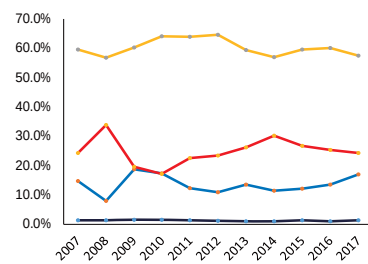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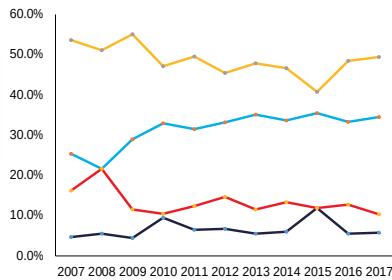
협력, 경쟁, 경계 이미지가 복합적

2016년 협력인식 감소, 경계인식 증가

유사시 5.24%가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함.

중국의 북한 지원을 우려하는 두려움이 커짐.

주변국의 통일 희망



소결

- 2016-2017년 사이 한국 사회의 진보화 경향이 보임. 이념 성향의 변화인지 또는 입장 표명에서 이념 성향별 차이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 장기 추세에서 한국인의 마음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미국으로 움직임. 이 현상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반면, 한국 사회의 진보화가 미국에 대한 친밀감 소폭 하락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 소폭 증가로 이어짐. 정의당 지지세력이 다른 정당 지지자와 확연히 구분되는 친밀감과 위협감을 가짐.
- 장기 추세에서 북한과 중국발 위협 인식이 강화됨. 반면, 한국 사회의 진보화가 북한발 위협 인식의 소폭 하락으로 이어짐.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요약)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한국 사회의 진보화

-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인의 진보 성향이 강화됨 (“매우 진보적”이 2016년 2.8%에서 2017년 5.4%로 증가; “약간 진보적”이 2016년 23.0%에서 2017년 28.3%로 증가; “매우 보수적”이 2016년 3.1%에서 2017년 2.8%로 감소; “약간 보수적”이 2016년 20.3%에서 2017년 17.1%로 감소)
- 이념 성향의 평균은 역대 최저치 기록. 2016-17년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증가함.
- 이 변화가 한국인의 이념 성향 변화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이념 성향별 입장 표명에서 자신감의 차이인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함. 즉, 진보 성향의 한국인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감 있게 진보 성향을 드러냈는지 또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 성향을 감추었는지 아닌지를 현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음.

2. 한국 사회의 진보화와 주변국과의 친밀감

- 장기 추세를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인의 마음이 미국으로 움직임. 특히, 남북 관계에서 경색국면(2013년 위기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후 한국인의 대미 친밀감이 증가함.
- 연령대별 주변국과의 친밀감이 큰 추세에서는 수렴 현상을 보임. 2007년 연령대별 분화가 이제는 매우 약해짐.
- 한국 사회의 진보화가 주변국과의 친밀감에 소폭 영향을 미침 (미국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2016년 73.8%에서 2017년 69.2%로 소폭 하락; 북한에 친밀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2016년 10.8%에서 2017년 14.9%로 증가). 진보-보수 균열선이 미국과의 친밀감과 북한과의 친밀감 사이에서 움직임.
- 2016-2017년 사이 40대 이하에서는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소폭 감소하고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함,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소폭 증가하고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함. 2016-2017년 사이 변화가 장기 추세에 반영되어 연령대별 분화가 발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북한에 대한 친밀감 증가는 중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으로 이어짐; 미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은 일본에 대한 친밀감 증가로 이어짐. 즉 진보 성향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친밀감이 움직이는 반면, 보수 성향에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친밀감이 움직임.
- 미국에 대한 친밀감에서 정의당 지지자들이 매우 특이한 성향을 보임 [국민의당(75.9%) > 자유한국당(75.2%) > 더불어민주당(73.1%) > 무당파(72.8%) > 바른정당(72.7%) > 정의당(55.2%)]. 미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은 정의당 지지자의 증가 또는 정의당 지지자의 입장 표명과 관련되어 있음.

- 북한에 대한 친밀감에서 정당별 분화가 이루어짐 [정의당(17.2%) > 더불어민주당(14.9%) > 자유한국당(12.4%) > 국민의당(7.4%) > 무당파(8.7%) > 바른 정당(4.6%)]. 이중 바른정당 지지자들이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거의 보이지 않음.

3. 한국 사회의 진보화와 주변국으로부터 위협감

- 장기 추세를 보면 한반도에서 북한이 가장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됨 (2017년 조사의 경우 62.4%). 중국이 북한 다음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됨 (2017년 조사의 경우 23.0%).
- 장기 추세를 보면, 연령대별 위협 인식이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연령대별 위협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함 (미국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이 연령에 따라 감소함;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은 60대 > 50대 > 20대 > 30대 > 40대 순으로 강함; 중국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은 40대 > 30대 > 50대 > 20대 > 60대 순으로 강함).
- 2016-2017년 사이 한국 사회의 진보화가 북한발 위협에 대한 소폭 하락으로 이어짐 (2016년 64.8%에서 2017년 62.4%). 반면, 2016-2017년 사이 한국 사회의 진보화가 중국발 위협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중국발 위협 인식은 오히려 증가함 (17.5%에서 23.0%로 증가).
- 정당 지지별로 북한발 위협 인식이 차이를 보임 [무당파(66.4%) > 더불어민주당(61.4%) > 자유한국당(61.3%) > 바른정당(59.1%) > 국민의당(53.7%) > 정의당(44.8%)]. 정의당 지지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감이 가장 작음.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 인식이 다른 주요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현저하기 낮는데, 이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호남에 주로 거주함으로써 북한과의 거리로 인한 안도감으로 추정됨.
- 정당 지지별로 미국발 위협 인식이 차이를 보임 [정의당(13.8%) > 국민의당(13.0%) > 바른정당(11.4%) > 더불어민주당(5.7%) > 자유한국당(3.7%) > 무당파(2.8%)].

4. 한국 사회의 진보화와 주변국에 대한 정책 인식

- 장기 추세를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통일에 대하여 가장 우호적이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게 우호적 세력으로 인식함.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동시에 경계와 경쟁이 더 강하게 덧붙여짐. 또한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게 우호적 세력으로 인식함.
-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응답이 여전히 지배적임. 일본에 대한 경계감과 경쟁감이 약간 약화되는 단기적 변화가 나타남.
-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춤. 미국이 한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협력 대상이지만, 유사시 한국 지원을 예상하는 응답은 2016년 73.3%에서 2017년 66.5%로 하락,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리라고 예상하는 응답은 2016년 22.5%에서 27.3%로 증가함.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 질문

- 경제평가가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경제평가는 영향력을 가지는가?
- 경제평가가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연구

- 독립변수로서 경제
 - 투표 등의 정치행동과 정당일체감 등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 거시적 경제상황: 국민총생산, 일인당국민총생산 증가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측정되며, 특히 집합적 차원에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시계열 및 국가 간 비교연구에 많이 사용
 - 주관적 경제평가: 시민들의 과거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적(prospective) 평가 / 전반적인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사회적(sociotropic) 평가와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개인적(pocketbook) 평가
- 기존 연구의 한계
 - 주로 투표행동과의 관계에서 분석되어 옴 => 투표를 넘어 여타 정치행동 및 태도에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을 간과
 - 경제투표(economic voting)에 대한 이론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국가들에 편향된 채 발전 => 비서구권 국가의 독특한 정치환경 안에서 경제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

기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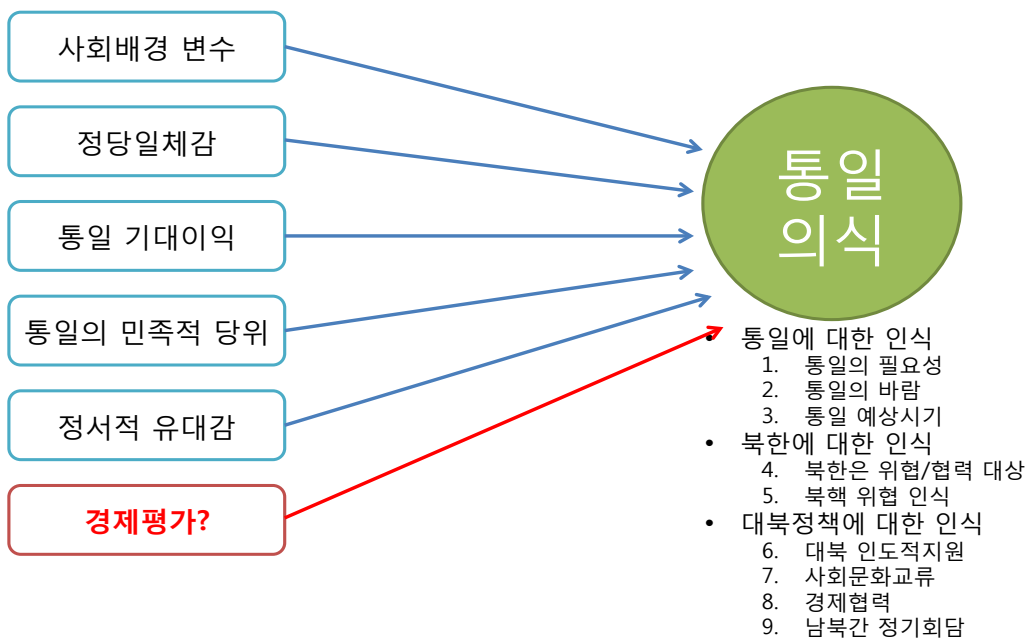
- 종속변수로서 통일의식
 - 기존 연구에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루어진 변수들:
 - 나이, 성별, 출신지역, 교육과 소득수준 같은 기본적인 사회배경 변수
 - 세대별로 상이하게 경험한 역사적 상황
 - 시기별로 급변해 온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정세
 - 이념적 성향과 정당일체감
 -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유대감
 - 통일에 대한 기대 이익 등
 -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요인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기존 연구

• 경제평가 → 통일의식?

- 통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남한의 몫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으면 그만큼 비용 지불에 대해 보다 관대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통일인식이 형성될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상황이 좋다고 느낄수록 북한이 가하는 안보적 위협들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여러 포용적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경기가 호황일 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

연구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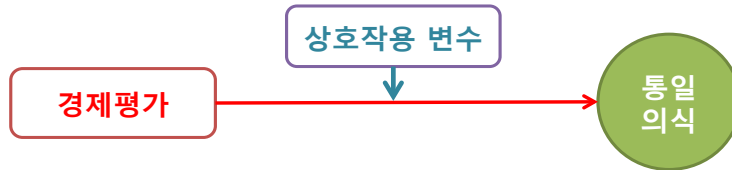


연구 가설

- 경제평가의 독립적 영향(independent effects)에 대한 가설
 - 통일에 대한 인식: 현재의 경제상황에 보다 만족할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통일에 대해 더 간절한 염원을 가지며, 통일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예상할 것
⇒ **가설 1: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가질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인식: 우리의 경제상황에 더 만족한다면,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게 될 것.
⇒ **가설 2: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감소할 것이다.**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본 분석의 정책들이 모두 북한에 대해 진보적, 포용적인 통일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평가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결 될 수 있음
⇒ **가설 3: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포용적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연구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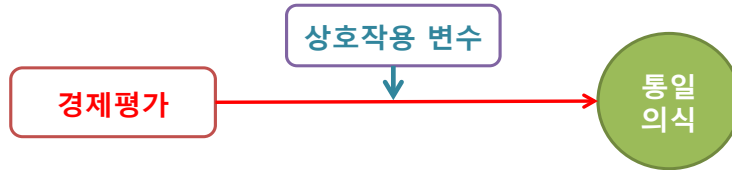
-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interaction effects)에 대한 가설



-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 통일을 비용으로 인식할수록 경제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통일을 이익으로 인식할수록 경제상황이 좋든 아니든 통일은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될 것
⇒ **가설 4: 통일을 이익으로 여기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정당일체감: 진보적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여겨더라도,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통일과 대북관을 견지하게 될 것
⇒ **가설 5: 진보정당에 일체감을 갖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가설

-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interaction effects)에 대한 가설



- 통일의 민족적 당위: 통일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민족적 과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지지할 것

⇒ **가설 6: 통일을 민족의 과업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 북에 있는 주민들을 나와 같은 동포로 여기며 가깝게 느낄수록, 우리의 경제상황이 힘들더라도 보다 진취적인 통일에 대한 자세를 견지할 것

⇒ **가설 7: 북한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분석 결과

- 경제평가의 독립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델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나이	0.04***	(1.04)	0.04***	(1.04)	-0.03***	(0.97)	-0.01***	(0.99)	0.00***	(1.00)
여성	-0.46***	(0.63)	-0.34***	(0.71)	0.30***	(1.35)	-0.15***	(0.86)	0.25***	(1.29)
교육수준	0.30***	(1.35)	0.26***	(1.30)	-0.25***	(0.77)	-0.08***	(0.92)	0.07**	(1.07)
소득수준	-0.04**	(0.96)	-0.04**	(0.96)	0.01	(1.01)	0.04**	(1.04)	0.00	(1.00)
호남지역 출신	0.60***	(1.83)	0.58***	(1.79)	-0.19***	(0.82)	-0.45***	(0.64)	0.15***	(1.17)
영남지역 출신	-0.30***	(0.74)	-0.37***	(0.69)	0.22***	(1.24)	0.18***	(1.19)	-0.04	(0.96)
이념성향	-0.22***	(0.80)	-0.20***	(0.82)	0.18***	(1.20)	0.15***	(1.16)	0.10***	(1.10)
경제평가	0.19***	(1.21)	0.19***	(1.21)	-0.28***	(0.75)	-0.11***	(0.90)	-0.06**	(0.94)
응답자수	13,121		13,120		13,117		13,120		13,120	
Log-Likelihood	-18769.17		-13228.58		-21548.64		-17774.21		-14636.62	

변 수	대북 인도적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나이	0.02***	(1.02)	0.02***	(1.02)	0.01***	(1.01)	0.02***	(1.02)
여성	-0.16***	(0.85)	-0.11***	(0.89)	-0.10***	(0.90)	-0.19***	(0.83)
교육수준	0.25***	(1.28)	0.30***	(1.35)	0.19***	(1.21)	0.24***	(1.27)
소득수준	0.04**	(1.05)	0.06***	(1.06)	0.07***	(1.07)	0.07***	(1.07)
호남지역 출신	0.79***	(2.19)	0.69***	(1.99)	0.71***	(2.03)	0.66***	(1.93)
영남지역 출신	-0.27***	(0.77)	-0.32***	(0.73)	-0.28***	(0.76)	-0.32***	(0.72)
이념성향	-0.25***	(0.78)	-0.22***	(0.80)	-0.26***	(0.77)	-0.22***	(0.80)
경제평가	0.17***	(1.18)	0.14***	(1.15)	0.10***	(1.10)	0.13***	(1.14)
응답자수	13,120		13,119		13,118		13,118	
Log-Likelihood	-15678.57		-15338.91		-15350.90		-15178.34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분석 결과

-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통일 기대이익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7***	(1.19)	0.18***	(1.19)	-0.27***	(0.77)	-0.12***	(0.89)	-0.15***	(0.86)
통일 기대이익	1.48***	(4.39)	1.35***	(3.85)	-0.99***	(0.37)	-0.67***	(0.51)	-0.32***	(0.73)
경제평가×통일 기대이익	-0.10**	(0.91)	-0.09*	(0.91)	0.05	(1.05)	0.07	(1.07)	0.17***	(1.19)
응답자수	13,119		13,118		13,115		13,118		13,118	
Log-Likelihood	-18014.96		-12748.51		-21168.35		-17642.26		-14627.33	

변 수	대북 인도적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6***	(1.18)	0.17***	(1.18)	0.12***	(1.13)	0.18***	(1.19)
통일 기대이익	1.07***	(2.91)	1.19***	(3.30)	1.09***	(2.96)	1.20***	(3.32)
경제평가×통일 기대이익	-0.08*	(0.92)	-0.14***	(0.87)	-0.13***	(0.88)	-0.17***	(0.84)
응답자수	13,118		13,117		13,116		13,116	
Log-Likelihood	-15317.91		-14982.01		-15057.34		-14856.31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통제변수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분석 결과

-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정당일체감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9***	(1.21)	0.20***	(1.23)	-0.28***	(0.75)	-0.14***	(0.87)	-0.06*	(0.94)
진보정당 지지	0.25	(1.28)	0.35**	(1.42)	-0.20	(0.82)	-0.26*	(0.77)	-0.05	(0.95)
경제평가×진보정당지지	-0.03	(0.97)	-0.07	(0.93)	0.01	(1.01)	-0.03	(0.97)	-0.02	(0.98)
응답자수	8,352		8,351		8,351		8,351		8,352	
Log-Likelihood	-11985.17		-8724.93		-13717.91		-11727.50		-9026.76	

변 수	대북 인도적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6***	(1.17)	0.15***	(1.16)	0.14***	(1.14)	0.18***	(1.20)
진보정당 지지	0.56***	(1.75)	0.14	(1.15)	0.43***	(1.54)	0.50***	(1.64)
경제평가×진보정당지지	-0.07	(0.94)	0.00	(1.00)	-0.09	(0.91)	-0.13*	(0.87)
응답자수	8,352		8,351		8,350		8,350	
Log-Likelihood	-9988.45		-9834.42		-9750.29		-9630.90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통제변수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분석 결과

-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통일의 민족적 당위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9***	(1.21)	0.18***	(1.20)	-0.30***	(0.74)	-0.11***	(0.89)	-0.11***	(0.90)
민족정체성	0.27***	(1.31)	0.23**	(1.26)	-0.23**	(0.79)	-0.49***	(0.61)	-0.37***	(0.69)
경제평가×민족 정체성	-0.01	(0.99)	0.01	(1.01)	0.04	(1.04)	0.01	(1.01)	0.12**	(1.12)
응답자수	13,087		13,086		13,083		13,086		13,086	
Log-Likelihood	-18654.87		-13152.19		-21487.46		-17605.86		-14583.46	

변 수	대북 인도적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2***	(1.12)	0.09***	(1.09)	0.07**	(1.07)	0.13***	(1.14)
민족정체성	-0.05	(0.96)	-0.14	(0.87)	0.04	(1.04)	0.12	(1.12)
경제평가×민족 정체성	0.11**	(1.12)	0.12**	(1.12)	0.06	(1.06)	0.00	(1.00)
응답자수	13,086		13,085		13,084		13,084	
Log-Likelihood	-15608.33		-15276.70		-15283.15		-15116.41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통제변수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분석 결과

-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 정서적 유대감

변 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		통일 예상시기		북한 위협대상 인식		북핵 위협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22***	(1.24)	0.21***	(1.23)	-0.30***	(0.74)	-0.11***	(0.89)	-0.13***	(0.88)
정서적 유대감	0.79***	(2.20)	0.79***	(2.21)	-0.60***	(0.55)	-0.53***	(0.59)	-0.35***	(0.71)
경제평가×정서적 유대감	-0.13***	(0.88)	-0.12**	(0.89)	0.09*	(1.09)	0.05	(1.05)	0.17***	(1.18)
응답자수	13,105		13,104		13,102		13,104		13,105	
Log-Likelihood	-18623.31		-13100.93		-21437.89		-17673.33		-14611.19	

변 수	대북 인도적지원의 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 효용성		경제협력의 효용성		남북 간 정기회담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경제평가	0.19***	(1.20)	0.16***	(1.18)	0.13***	(1.14)	0.16***	(1.17)
정서적 유대감	0.68***	(1.97)	0.74***	(2.09)	0.75***	(2.11)	0.72***	(2.05)
경제평가×정서적 유대감	-0.10**	(0.91)	-0.11**	(0.90)	-0.14***	(0.87)	-0.13**	(0.88)
응답자수	13,105		13,104		13,103		13,103	
Log-Likelihood	-15560.28		-15206.83		-15239.47		-15067.28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통제변수의 결과 및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분석 결과

< 독립적 효과 >

가설 1: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포용적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 상호적 효과 >

가설 4: 통일을 이익으로 여기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진보정당에 일체감을 갖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6: 통일을 민족의 과업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7: 북한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가설 지지, 가설 기각

결론

- 이론적으로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에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향후 통일의식 연구에서 경제평가가 하나의 요소로 고려 되어 함
- 정책적으로 통일, 보다 넓게는 서로 다른 사회 간의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결국 경제적, 물질적 요인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됨을 보여줌
 - 올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역시, 아무리 현재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더라도 안정적인 경제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대북 포용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
 - 안정적인 기초여건을 기반으로 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갈 필요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요약)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기존 연구

- 경제는 투표 등의 정치행동과 정당일체감 등의 정치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수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옴
 - 거시적 경제상황: 국민총생산, 일인당국민총생산 증가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측정되며, 특히 집합적 차원에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시계열 및 국가 간 비교연구에 많이 사용
 - 주관적 경제평가: 시민들의 과거 경제상황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적(prospective) 평가, 전반적인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사회적(sociotropic) 평가와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개인적(pocketbook)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경제변수는 주로 투표행동과의 관계에서 분석되었고,
 - 그러한 경제투표(economic voting)에 관한 이론들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국가들에 편향된 채 발전되어 옴
 - 투표를 넘어 여타 정치행동 및 태도에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을 간과
 - 비서구권 국가의 독특한 정치 환경 안에서 경제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
-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통일의식의 측면에서도, 경제를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음
 - 기존 연구에서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루어진 변수들은:
 - 나이, 성별, 출신지역, 교육과 소득수준 같은 기본적인 사회배경 변수
 - 세대별로 상이하게 경험한 역사적 상황
 - 시기별로 급변해 온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정세
 - 이념적 성향과 정당일체감
 -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유대감
 - 통일에 대한 기대 이익 등
 -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요인에서 제외됨
- 경제평가도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통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남한의 몫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라의 경제상황이 좋으면 그만큼 비용 지불에 대해 보다 관대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통일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상황이 좋다고 느낄수록 북한이 가하는 안보적 위협들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정부의 여러 통일/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경기가 호황일 때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

- 본 분석에서는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요인들을 통제 한 후,
 - 경제평가가 개인의 통일의식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 그리고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 함

2. 연구 가설

-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 크게 세 범주의 아홉가지 질문으로 구성
 - 통일에 대한 인식: (1)통일을 얼마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2)얼마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3)언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 북한에 대한 인식: (4)북한이 지원과 협력의 대상인지 아니면 경계와 위협의 대상인지, (5)북한의 핵보유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지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6)대북 인도적 지원, (7)사회문화 교류, (8)경제협력, 그리고 (9)남북간 정기적인 회담 등 일련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지

2-1. 경제평가의 독립적 영향(independent effects)에 대한 가설

- 먼저,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보다 만족할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통일에 대해 더 간절한 염원을 가지며, 통일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예상할 것.

가설 1: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통일인식을 가질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우리의 경제상황에 더 만족한다면,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보다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게 될 것

가설 2: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감소할 것이다.

- 대북정책의 경우, 본 분석의 정책들이 모두 북한에 대해 진보적, 포용적인 통일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평가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

가설 3: 현재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포용적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2-2.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interaction effects)에 대한 가설

- 경제평가와 통일인식 사이의 관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기 힘들
 - 통일인식에는 경제평가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
 - 통일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것
 - 반면 통일을 이익으로 인식한다면,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은 아니든 통일은 필요한 것이라 여기게 될 것

가설 4: 통일을 이익으로 여기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정당일체감
 - 특정 이념성향을 지닌 정당을 지지할수록,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그 정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및 통일관을 지지하게 될 것
 - 특히 진보적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여기더라도,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통일과 대북관을 견지하게 될 것

가설 5: 진보정당에 일체감을 갖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통일의 민족적 당위
 - 통일을 경제적 관점이 아닌 민족적 과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지지할 것

가설 6: 통일을 민족의 과업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

- 북에 있는 주민들을 나와 같은 동포로 여기며 가깝게 느낄수록, 우리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못하다 하더라도 보다 진취적인 통일에 대한 자세를 견지할 것
- 북한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간접적으로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느끼는 수용적 태도로 측정

가설 7: 북한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집단에서, 경제상황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3. 변수 및 연구 방법

○ 자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2007년-2017년

○ 종속변수

- 통일에 대한 필요성(“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5: 매우 필요하다)
- 통일에 대한 염원(“남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4: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3: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2: 현재대로가 좋다, 1: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 통일 예상시기(“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는지’(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견해’(1: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매우 위협을 느낀다)
-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 간 정기회담’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네 문항(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매우 도움이 된다)

○ 독립변수

- 경제평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4점 척도의 문항(1:매우 불만족~ 4:매우 만족)
-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 통일이 남한사회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정당일체감: 진보정당으로 분류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조사, 지지하면 1,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 0으로 코딩
- 통일의 민족적 당위: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를 고른 응답자를 1로, 그 외의 다른 이유(이산가족 고통 해결, 전쟁위협 해소, 북한이 잘 살도록, 남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도록 등)를 고른 응답자를 0으로 코딩
- 정서적 유대감: 탈북자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가란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친근하게 느끼는 응답자를 1로, 별로 또는 전혀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0으로 코딩
- 기타 사회배경 변수-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신지역(호남 혹은 영남 출신), 정치적 이념-를 통제변수로 포함

4. 분석 및 결과

○ 경제평가의 '독립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델(ppt 표 참조)

- 위의 가설 1~3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통일을 보다 필요로 하고 통일을 더 염원하며, 통일이 좀 더 일찍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
-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위협 인식의 감소로 이어짐
-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이 대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그리고 정기적 회담 등, 보다 진보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끌어안는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로 연결

○ 경제평가의 '상호적 영향'에 대한 순위로짓 모델(ppt 표 참조)

- 가설 4(통일 기대이익)와 가설 7(정서적 유대감)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설 5(정당일체감)와 6(민족적 당위)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 통일이 우리 사회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통일에 대한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경제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 통일에 대한 바람이 떨어지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정도가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도 여전히 경제평가의 중요성은 크게 나타남

- 북한주민들을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에게서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한 것으로 보임

5. 결론

-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사이에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경제평가가 투표행동과 당파성 같은 고전적인 정치행동과 태도를 넘어 보다 넓고 다양한 범주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침이 확인
 - 통일의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요인들 외에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혀냄
 - 통일의식의 분석에 있어 경제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칫 변수누락으로 인한 추정의 편향(misspecification)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 통일, 보다 넓게 서로 다른 사회 간의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결국 경제적, 물질적 요인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됨을 보여줌
 - 현재의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해야 그러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집단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음
 - 특히 당파성을 초월하여 경제가 통일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무리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더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올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역시, 대북 포용정책도 안정적인 경제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국정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튼튼한 경제적 기초여건을 갖추면서 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갈 때,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위협인식(perceived threat)”이
탈북자 및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2017 통일외식조사

“위협인식(perceived threat)”이
탈북자 및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7. 9.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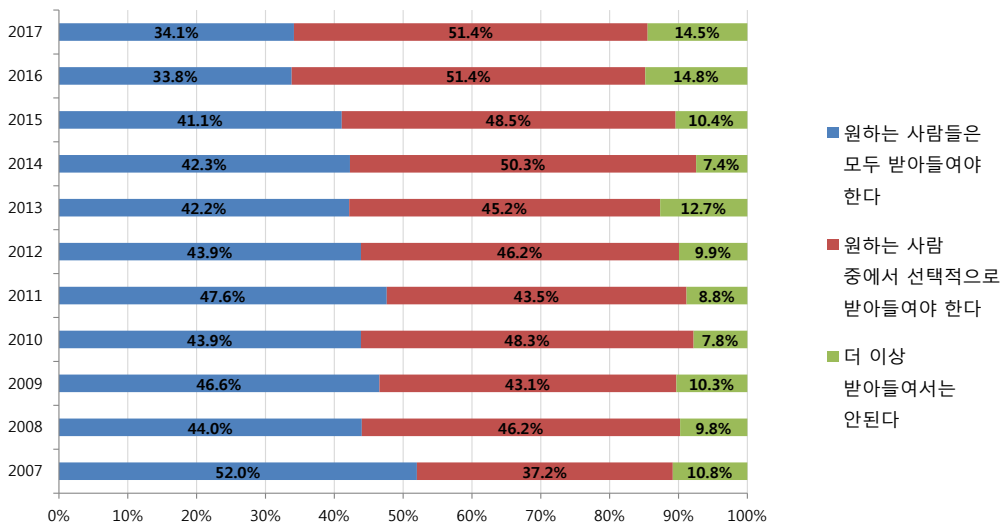
목 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 시계열 추이
- “위협 인식” 개념과 가설
 - 1) 소수자/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위협 인식
 - 2) 안보와 위협 인식
- 회귀 분석 (모델 1, 2, 3)
- 분석결과
 - 1) 위협 인식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2) 위협 인식과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3) 위협 인식과 북핵우선 해결 정책에 대한 태도
- 결론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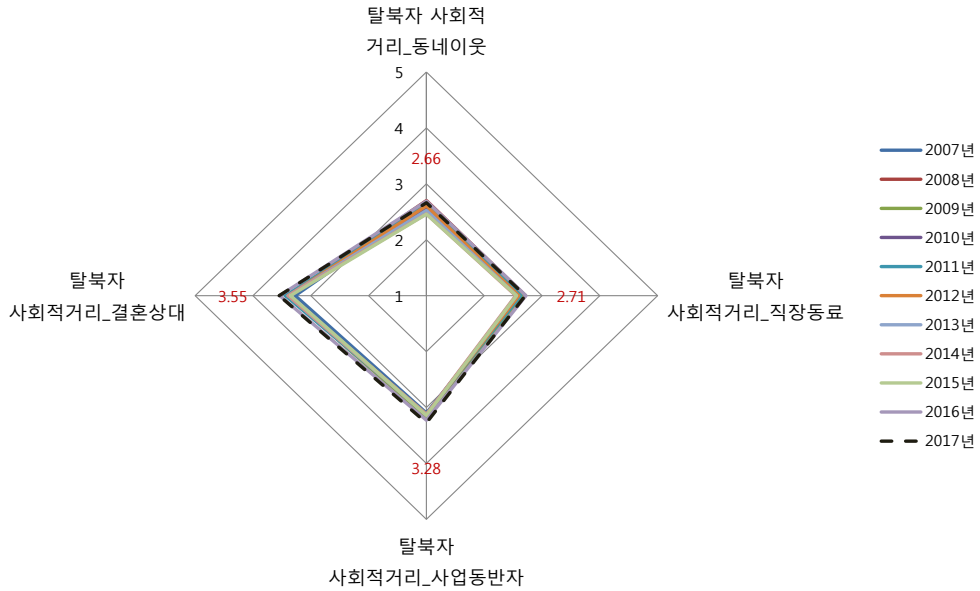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2007년~2017년의 기간 동안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나 완만하게 변화해 왔음.
- 탈북자 수용 :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 52.0%에서 2017년 34.1%로 감소했으며, “더 이상 탈북자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4.5%로 증가함.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 탈북자를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 얼마나 꺼리는지를 조사한 결과, 시계열적으로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증가세는 매우 완만함.
-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 :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점 척도 평균값 기준으로 2007년 2.63에서 2017년 2.31로 낮아졌음.
- 탈북자로 인한 남한 사회의 경쟁악화에 대한 우려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조사에서 다소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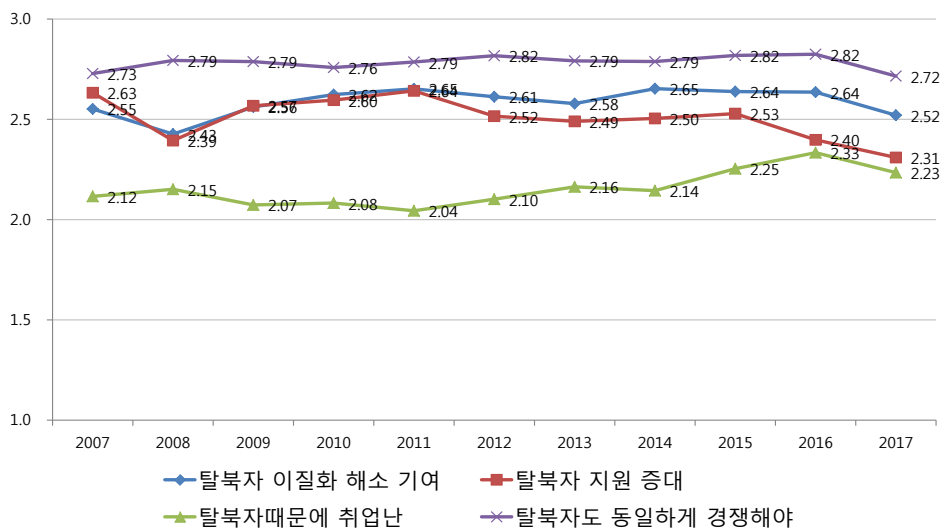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 (2007~2017)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07~20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2007~2017)



※ 4점 척도 (1점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점: 매우 동의함)

위협 인식 (perceived threat) – 소수자/이민자에 대한 태도

-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 : 한 사회의 다수자 집단은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됨.
- 집단 간 경쟁이론 (intergroup competition theory - Scheepers 2002; Quillian 1995; Schlueter et. al. 2013).
- 경제적 위협 : 양질의 일자리, 복지국가의 정책 지원 등 등 가치 있는 재화에 대한 집단 간 경쟁
- 문화적 위협 : 다수의 사회구성원들과 이질적인 도덕, 규범, 가치로 인한 문화적 질서의 위협
- 개인적 위협(personal threat)과 집합적 위협(collective threat) (Scheepers et. al. 2002) : 개인적 위협인식은 자신의 재정 상황 악화, 과거보다 지위가 하락했다는 인식임. 집합적 위협은 가령 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외집단(outgroup)이 늘어나면 전체 사회의 경쟁 악화로 기존 이해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연관됨.

안보(security)와 위협 인식

- **“존재론적 안전 (ontological security)”** : 다수 인간들이 자아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기 주변의 사회적 물질적 행위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Giddens, 1990: 92).
- 21세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 환경 위기와 기상이변, 원전 사고 등은 일상 속에서 존재론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사건임.
- 9.11 이후 미국인의 태도 연구(Crowson, Debacker & Thoma, 2006).
 - 테러로 인한 위협 인식과 공포감의 증가
 - 인지적 폐쇄(cognitive closure) - 권위주의적 지배의 수용
 - 소수자/이방인에 대한 공격을 용인/ 전쟁 찬성
 - 개인의 가치관 - 매개 요인으로 권위주의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 혹은 약화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가설 : “위협 인식 (perceived threat)”과 정책에 대한 태도

-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 ✓ 가설 1 : 위협 인식이 높으면 탈북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지원에 반대할 것이다.
- ✓ 가설 2 : 위협 인식이 높으면 대북 지원 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 가설 3 : 위협 인식이 높으면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 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 가설 4 : 위협 인식의 이러한 영향은 응답자의 가치관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될 것이다.

“탈북자 지원 정책 증대” : 회귀분석 모델 (1) (multiple regression)

	1단계	2단계	3단계
인구/사회 변인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가구소득		
위협 인식		• 안보위협 • 경제위협 • 사회문제 심각성	
가치관			• 민주주의 지지 (2017) • 다문화수용성 (2012~) • 한국인 자긍심 • 진보/중도/보수 • 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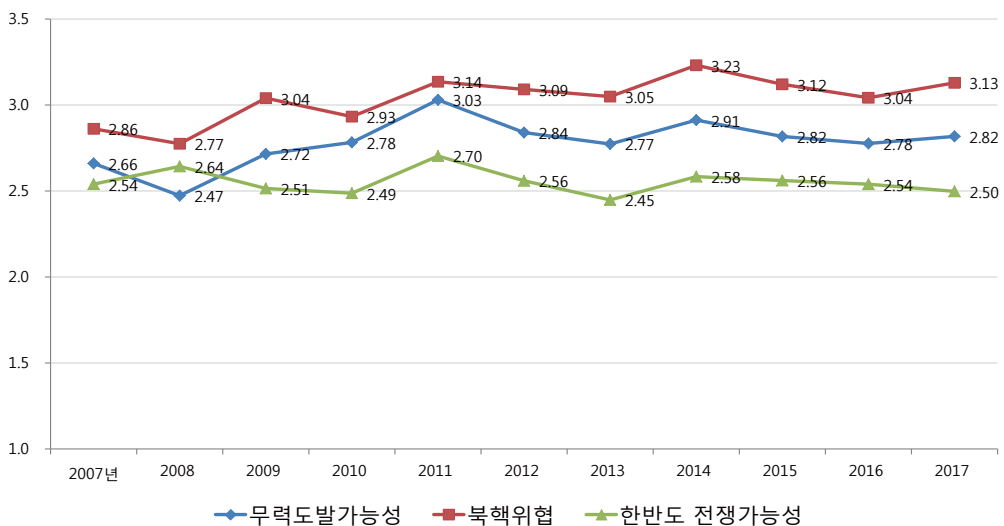
◆ 종속변인 :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4점 척도)

위협 인식 - 측정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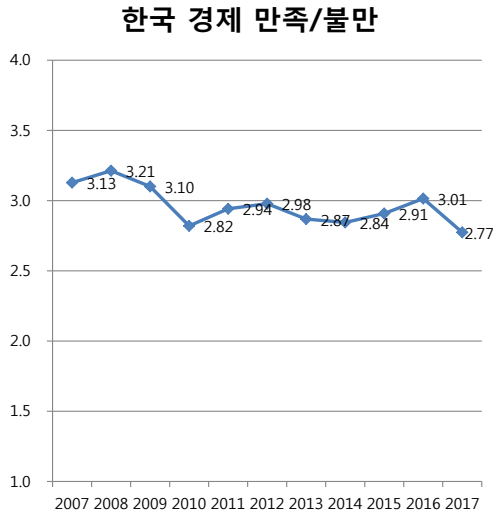
분류	문항	비고
안보 위협	핵무기 위협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한반도 전쟁 가능성	
경제 위협	한국 경제 만족도 (불만)	(개인적 위협)
	생활수준 개선 (악화)	
사회문제 심각성	빈부격차	(집합적 위협)
	실업문제	

※ 위협 인식 (perceived threat)을 측정하는 척도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함.
여기에서는 안보위협, 경제위협, 사회문제 심각성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협을 더 심각하게 느낄 수록 탈북자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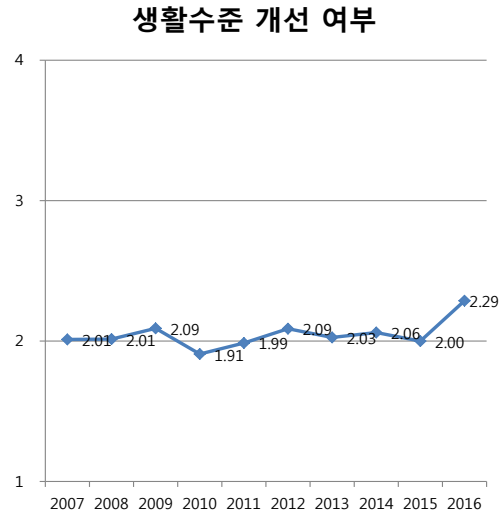
안보위협 인식 변화 (2007~2017)



경제 위협 인식변화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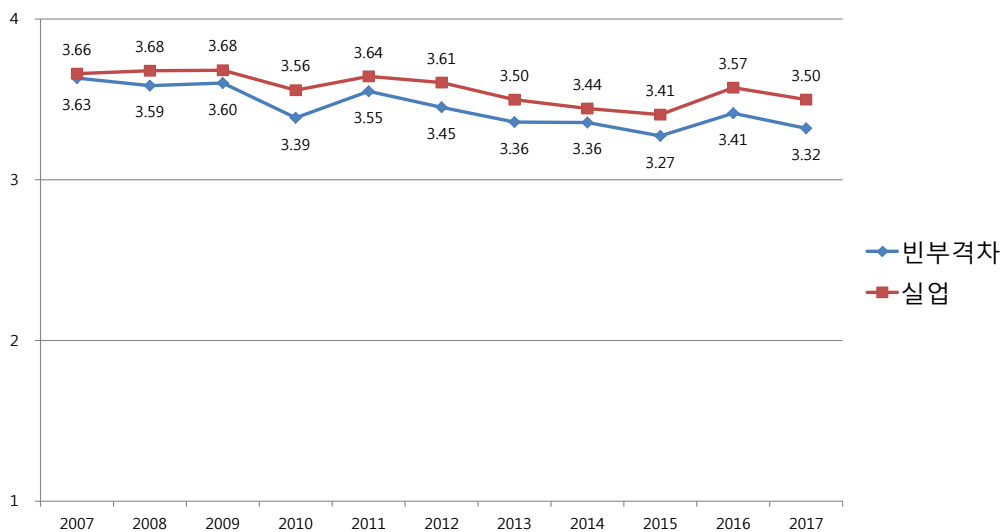


※ 1점 : 매우 만족 ~ 4점 매우 불만



※ 1점 : 훨씬 좋아졌다 ~ 5점 훨씬 나빠졌다.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변화(2007~2017)



※ 1점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각하다

회귀분석 (1-1) – 인구/사회 변인

“탈북자 지원정책 증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1.442***	1.782***	1.509***	1.750***	1.370***	1.253***	1.345***	.805**	1.763***	2.309***
성별 남성(d)	.050	-.009	.042	.066	.070	.040	.043	.047	.058	-.041
연령 19~29세 (d)	-.055	-.080	-.024	-.079	.036	-.026	.007	-.042	-.130	-.012
30대 (d)	.026	-.047	-.015	-.049	-.103	-.073	.026	-.014	-.077	-.060
50대(d)	-.075	.146*	-.005	.032	.041	-.036	-.001	.033	-.057	.035
60대 이상 (d)	-.081	-.128	-.171	.054	-.004	-.027	-.012	-.022	.059	.061
학력 중졸이하(d)	-.147	-.173*	-.058	-.141	-.279**	-.033	.098	.018	-.052	.070
대재이상(d)	.013	.182***	.140**	.175***	.083	.054	.047	.032	.053	-.038
소득 200 미만(d)	-.109	.031	.228**	-.084	.124	-.050	.102	-.225*	-.176*	-.113
200_299 (d)	-.053	-.001	.092	-.009	.068	.009	.050	-.093	-.010	.068
400이상 (d)	.085	.039	.209***	.078	.005	.023	.048	.062	.054	.049

*** : p<.001, ** : p<.01, * : p<.05

회귀분석 (1-2) : 위협 인식

“탈북자 지원정책 증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핵위협	.011	-.018	-.012	-.060*	-.041	-.017	-.012	.002	-.023	.074*
무력도발 가능성	-.015	.037	-.032	.020	.022	.022	.070*	.017	.040	.048
한반도 전쟁가능성	-.025	.026	.032	.063*	.074*	-.003	-.053	-.002	-.003	.006
생활형편 개선 불만	.014	.016	.013	-.042*	.000	.004	-.011	.029	-.007	-.017
한국경제 불만	-.034	-.095**	-.106**	.004	-.049	-.064	-.030	.001	-.012	.019
빈부격차 심각성	.017	.059	.099*	.064	.029	-.011	-.036	.089*	.006	-.035
실업문제 심각성	.043	.036	.078	-.035	.005	.040	.026	.002	-.062	-.053

*** : p<.001, ** : p<.01, * : p<.05

회귀분석 (1-3) : 가치관 변인

“탈북자 지원정책 증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치관	민주주의가치										-.056
	다문화 수용성					.119***	.176***	.090**	.153***	.104***	.180***
	한국인 자긍심	.143***	.007	.042	.066*	-.005	.082*	.133***	.165***	.043	-.002
	진보(d)	.045	.145**	.134**	.124**	.077	-.030	.049	-.016	-.023	.106*
	보수 (d)	-.003	-.051	-.047	-.013	-.042	-.103	.052	-.071	-.140*	-.007
	통일 필요성	.190***	.138***	.123***	.139***	.154***	.121***	.121***	.086***	.116***	.126***
모델 적합도	R2	.153	.116	.117	.126	.159	.107	.085	.112	.080	.126
	F	9.784***	7.211***	7.323***	8.002***	9.920***	6.307***	4.851***	6.642***	4.639***	7.271***
R2 변량 위협인식		.014	.017	.025	.016	.020	.010	.010	.018	.006	.015
	가치관	.107	.058	.051	.065	.091	.079	.061	.079	.05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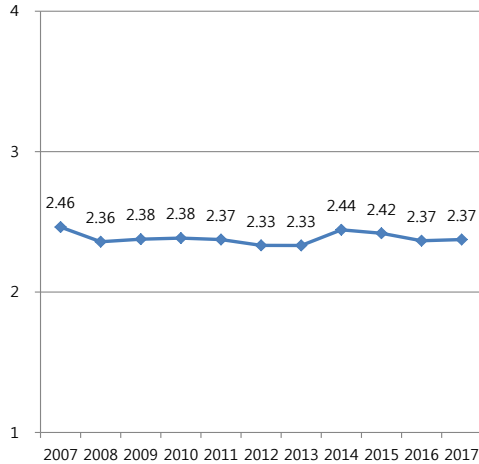
*** : p<.001, ** : p<.01, * : p<.05

위협인식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안보 위협인식이 높아지면 탈북자 지원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2011년만 예외). 오히려 2012년 이후에는 북핵이나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탈북자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남. 안보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한 북한체제에서 탈출해온 탈북자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일단이 나타나고 있음.
- 경제 위협인식이 높으면 탈북자 지원에 부정적인 경향은 2009, 2010, 2011년에 나타남.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탈북자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다문화 수용성,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진보적 정치 성향은 탈북자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짐.
- 단계별 R2 변량을 보면,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는 위협 변인 보다는 가치관 변인들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고 있음. 즉, 위협 인식 보다는, 통일의 필요성이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긍정적 지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모델에 따르면, 탈북자로 인한 경제적 위협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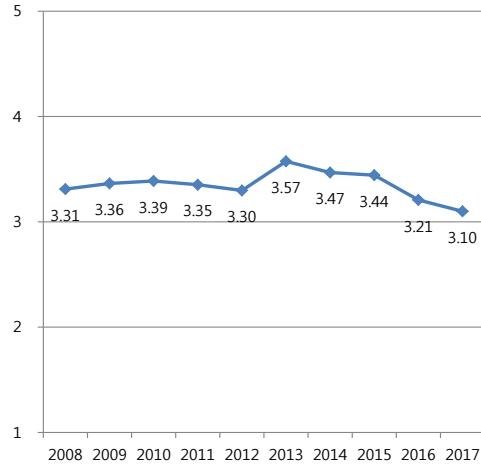
대북지원 긍정/북핵 해결 우선 : 태도 변화 (2007~2017)

대북지원 긍정



※ 1점 : 전혀 도움되지 않음 ~ 4점 매우 도움 된다

북핵해결 우선



※ 1점 : 매우 반대 ~ 5점 매우 찬성

“대북 지원정책 긍정” : 회귀분석 모델(2) (multiple regression)

	1단계	2단계	3단계
인구/사회 변인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가구소득		
위협 인식		• 안보위협 • 경제위협 • 사회문제 심각성	
가치관			• 민주주의 지지 (2017) • 다문화수용성 (2012~) • 한국인 자긍심 • 진보/중도/보수 • 통일 필요성

◆ 종속변인 :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된다” (2007~2016)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된다”(2017) (4점 척도)

회귀분석 (2-1) : 인구/사회 변인

“대북 지원정책 긍정”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2.088***	2.121***	2.199***	2.243***	1.903***	2.237***	2.680***	1.746***	2.181***	1.601***
남성(d)	.109*	-.010	-.006	.028	.028	.001	-.019	-.034	-.003	.004
19~29세 (d)	.010	-.029	-.032	-.070	-.097	-.155*	.036	.017	-.123	.047
30대 (d)	.074	-.065	-.200**	-.075	-.014	-.047	.053	.079	-.049	.064
50대(d)	-.001	-.075	-.007	.055	.027	-.016	.010	.005	.034	.172*
60대 이상 (d)	.022	-.122	-.092	-.131	-.109	.159	.002	.139	-.085	.225**
중졸이하(d)	.162	-.080	-.078	-.011	-.078	-.240*	-.167	-.026	.077	-.018
대재이상(d)	.130*	.057	.143*	.153**	.109*	.058	-.045	-.081	-.002	.077
소득 200 미만(d)	-.227**	.111	.093	-.012	.170*	-.072	-.010	-.115	-.167	-.038
소득 200_299 (d)	-.098	.027	-.021	.109	-.014	.027	-.006	-.071	-.030	.099
소득 400이상 (d)	-.089	.098	-.059	-.023	.025	.012	-.022	.029	-.049	.046

*** : p<.001, ** : p<.01, * : p<.05

회귀분석 (2-2) : 위협인식

“대북 지원정책 긍정”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핵위협	.039	.035	.015	-.105	-.055	-.012	.028	-.025	-.023	-.047
무력도발가능성	-.049	-.054	-.044	-.024	-.059	.073*	-.051	-.007	.024	.026
한반도 전쟁가능성	.032	.009	-.038	.004	-.010	.057	.005	-.068	-.050	.023
생활수준 불만	.006	.002	-.017	-.021	.075**	.004	.008	.053*	.032	-.016
한국경제 불만	-.128***	-.131***	-.063	-.068*	-.081*	-.111**	-.117**	-.048	-.074	.013
빈부격차 심각성	-.007	-.001	.017	-.056	-.074	-.070	-.007	.067	-.006	-.095*
실업문제 심각성	.028	.043	-.043	.079	.012	.093	-.025	-.035	-.044	.027

*** : p<.001, ** : p<.01, * : p<.05

회귀분석 (2-3) : 가치관

“대북 지원정책 긍정”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치관	민주주의가치										.034
	다문화수용성					.097***	.016	-.104***	.113***	.102***	.091***
	한국인자긍심	.002	-.020	.028	.024	.057	-.129**	.034	-.009	.001	.012
	진보(d)	.033	.205**	.051	.100	.083	-.009	-.005	.161**	.081	.136**
	보수(d)	-.049	-.085	-.162*	-.123*	-.148*	-.062	-.001	.105	-.089	-.205**
	통일 필요성	.139***	.152***	.167***	.148***	.146***	.114***	.149***	.132***	.104***	.110***
모델	r square	.100	.095	.094	.112	.130	.070	.082	.093	.059	.088
	F	6.073***	5.810***	5.734***	6.967***	7.795***	3.965***	4.677***	5.375***	3.335***	4.860***
R2 변량	위협변인	.020	.020	.010	.025	.024	.019	.020	.017	.006	.008
	가치관	.045	.061	.061	.061	.076	.031	.056	.064	.043	.068

*** : p<.001, ** : p<.01, * : p<.05

위협 인식과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일반적으로 위협 인식이 높아지면 인도적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북한 주민에 대한 우선적인 인도적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항이 없어, 대북 지원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태도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음.
- 예상과 달리, 안보위협 인식은 대북 지원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달리 표현하면, 북한의 핵이나 무력도발 위험이 커진다고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 모델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 이와 달리 경제 위협 인식은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뚜렷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많은 사람들이 대북 지원 정책을 (안보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차원보다는)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흥미로운 점은 2015년 이후 경제적 위협인식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대북 지원이나 경제교류가 단절된 때문으로 분석됨.
- 대북 지원에 대한 태도는 가치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 통일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대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영향을 일관되며 통계적 유의도도 높음. 다문화 수용성도 유의도가 높은 편임. 정치적 보수 성향은 대북 지원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2010~12년 동안 나타나다가 2013~16년에는 사라짐. 2017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뚜렷하게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남.
- 전체적으로 위협 변인 보다는 가치관 변인이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북지원보다 북핵 해결 우선” : 회귀분석 모델(3) (multiple regression)

	1단계	2단계	3단계
인구/사회 변인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가구소득		
위협 인식		• 안보위협 • 경제위협 • 사회문제 심각성	
가치관			• 민주주의 지지 (2017) • 다문화수용성 (2012~) • 한국인 자긍심 • 진보/중도/보수 • 통일 필요성

◆ 종속변인 :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지원 하지 말아야 한다” (2008~2015)
“북핵문제 해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 하지 말아야”(2017) (5점 척도)

회귀분석 (3-1) : 인구/사회변인 “대북지원보다 북핵 해결 우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2553***	3027***	3231***	3101***	2774***	3072***	2602***	2984***	3139***	2391***
남성(d)	.014	.022	-.014	.082	-.079	.040	.012	-.007	-.055	-.070
19~29세 (d)	-.089	-.130	.053	-.049	.099	.044	.061	.037	.045	.041
30대 (d)	-.060	-.078	.126	-.018	-.167	.062	-.073	.035	.044	.070
50대(d)	-.002	.083	.076	.010	-.082	.044	.072	.089	-.035	-.047
60대 이상 (d)	-.095	.118	-.011	.049	.101	-.077	.124	-.041	-.148	.067
중졸이하(d)	-.044	.096	.104	-.082	-.108	-.010	.085	-.023	-.016	.025
대재이상(d)	-.127	-.078	-175*	-236**	-154*	-.052	-.082	-.093	-.023	.024
소득 200 미만(d)	-.152	.062	.031	-.086	-.035	-.112	-.031	.073	.113	-258*
소득 200_299 (d)	-.009	.100	-.039	-.055	.137	-193*	.035	.100	.131	-.153
소득 400이상 (d)	-.079	.058	.087	.069	-.072	-204**	.055	.008	-.049	-.098

*** : p<.001, ** : p<.01, * : p<.05

회귀분석 (3-2) : 위협 인식

“대북지원보다 북핵 해결 우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핵위협	.089*	.224***	.152**	.158***	.179***	.225***	.083	.077	.139**	.214***
무력도발가능성	.116*	.033	.197***	.140**	.084*	.083	.095*	.123**	.074	.148**
한반도 전쟁가능성	.058	.114*	-.009	.078	.044	-.021	.115*	.059	.011	.060
생활수준 개선 불만	.021	-.010	-.007	-.017	-.049	-.033	-.072*	-.029	.065*	.015
한국경제 불만	.026	.019	-.130**	-.123**	.053	.004	.043	.041	-.125*	-.069
빈부격차 심각성	.031	-.179**	-.148*	-.014	-.041	.036	-.011	.088	-.040	-.076
실업문제 심각성	.101	.099	.126*	.087	.005	-.017	.105*	-.077	.077	.063

*** : $p < .001$, ** : $p < .01$, * : $p < .05$

회귀분석 (3-3) : 가치관

“대북지원보다 북핵 해결 우선”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치관	민주주의가치										.072
	다문화 수용성					.033	-.007	-.018	-.020	-.112**	.046
	한국인 자긍심	-.031	.020	-.023	.029	.026	.009	.089	.031	-.001	-.109*
	진보(d)	-.101	-.137	-.174*	-.117	-.133	-.074	.106	.038	-.119	-.003
	보수(d)	.125	.103	.098	.006	.139	.238**	-.008	.015	.226**	.180*
모델	통일 필요성	-.084***	-.146***	-.074**	-.200***	-.104***	-.088**	-.144***	-.115***	-.024	-.100***
	r square	.067	.109	.086	.105	.092	.075	.061	.044	.059	.089
	F	3.951***	6.779***	5.175***	6.528***	5.288***	4.239***	3.362***	2.428***	3.348***	4.938***
R2 변량	위협변인	.035	.061	.056	.047	.037	.038	.026	.023	.026	.057
	가치관	.019	.031	.017	.047	.023	.024	.027	.016	.025	.020

*** : $p < .001$, ** : $p < .01$, * : $p < .05$

위협인식과 “북핵 우선해결” 정책에 대한 태도

- 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북핵 문제 우선 해결”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음. 특히 ‘북핵 위협’ 요인의 영향은 2015,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통계적 유의도가 높게 나타났음.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도 마찬가지로 “교류협력 보다 핵 문제 우선”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위협인식은 부분적으로 “북핵 문제 우선 해결” 정책에 대한 지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북핵 우선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향은 2010~2011년 사이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는 경제적 위협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
- 가치관 변인의 영향을 보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북핵 우선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짐. 또한 보수적 성향은 북핵 우선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지만, 진보 성향으로 인해 이에 반대하는 흐름은 2010년을 제외하면 나타나지 않았음.
- 전체적으로 북핵 우선 해결을 강조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는 가치관 요인 보다는 위협 변인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있음.

결론 및 토론

- 한계점 : 위협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문항이 사전에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가설과 가장 유사한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함.
- 의의 : 탈북자 지원, 대북 교류 확대 또는 억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도정치적 요인(정당이나 대통령에 대한지지, 정파적 진영논리)이 아닌 사회적 요인, 즉 안보 위기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에 의해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론적 연구로 의미가 있음.
-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는 위협 인식 보다는 가치관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됨.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 태도가 탈북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
- 대북 지원과 교류를 지지하는 태도는 안보 위협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지만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남. 대북 지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교류 보다 북핵 억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는 안보 위협인식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음.

결론 및 토론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안보 불감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 회귀 분석 결과, 시민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경제적 위협 인식이 나 안보 위협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북한의 핵무장으로 존재론적 안전이 위협받게 될 때, 시민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특히 통일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안보 위기 상황의 강경 대응과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 결과가 시사해주고 있음.

“위협 인식 (perceived threat)”이 탈북자/대북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약)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 시계열 추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2007년~2017년의 기간 동안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완만하게 변화해 왔음.
- 탈북자 수용 :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 52.0%에서 2017년 34.1%로 감소했으며, “더 이상 탈북자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4.5%로 증가함. 이러한 조사결과는 탈북자의 전폭적 수용보다는 선택적 수용, 혹은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같은 기간 동안 대북 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할 때 완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7년 조사 결과는 2016년 결과와 큰 변화가 없음.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 탈북자를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 얼마나 꺼리는지를 조사한 결과, 시계열적으로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증가세는 매우 완만함.
-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 :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점 척도 평균값 기준으로 2007년 2.63에서 2017년 2.31로 낮아졌음. 지난 10년간 탈북자 지원 정책이 체계화되고 정책 인지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정책 지원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임.
- 탈북자로 인한 남한 사회의 경쟁악화에 대한 우려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조사에서 다소 낮아졌음. 탈북자 때문에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4점 척도 기준 평균점수)는 2016년 2.33에서 2.23으로, 탈북자도 조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2.82에서 2.72로 소폭 낮아졌음.

2. 가설 :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

1) 소수자/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위협 인식

-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은 이민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태도를 설명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음. 즉, 한 사회의 다수자 집단은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됨. 위협인식 개념은 일반적으로 집단 간 경쟁이론(intergroup competition theory)을 전제함 (Scheepers 2002; Quillian 1995; Schlueter et. al. 2013).

- 위협 인식은 경제적 위협(양질의 일자리, 복지국가의 정책 지원 등 등 가치 있는 재화에 대한 집단 간 경쟁), 문화적 위협(다수의 사회구성원들과 이질적인 도덕, 규범, 가치로 인한 문화적 질서의 위협)로 구분되기도 함. 또한 위협 인식을 개인적 위협(personal threat)과 집합적 위협(collective threat)으로 구분하는 연구도 있음(Scheepers et. al. 2002). 개인적 위협인식은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또 예전보다 지위가 하락했다고 느낄 때 나타남. 집합적 위협은 가령 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외집단이 늘어나면 전체 사회의 경쟁이 악화되고 기존 다수자의 이해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연관됨.

2) 안보(security)와 위협 인식

- “존재론적 안전 (ontological security)” : 다수 인간들이 자아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기 주변의 사회적 물질적 행위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Giddens, 1990: 92). 현대사회의 유동성(fluidity)과 휘발성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 안전감을 확보할 때 개인들은 자아정체성을 지닌 행위자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음.
- 21세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 환경 위기와 기상이변, 원전 사고 등은 일상 속에서 존재론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사건임.
- 9.11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로 인한 위협 인식과 공포감의 증가가 인지적 폐쇄(cognitive closure), 권위주의적 지배의 수용, 나아가 소수자/이방인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는 태도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즉, 위협 인식이 높아지면 기존 지배세력의 권위주의를 지지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테러 방지 정책의 강화를 더 우선시하며 나아가 전쟁(이라크전)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여 권위주의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 혹은 약화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Crowson, Debacker & Thoma, 2006).

3) 가설

- 이 연구에서는 위협인식을 안보 위협, 경제 위협(개인적 위협), 사회문제의 심각성(집합적 위협)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위협 인식이 탈북자 지원 정책 및 대북 지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단, 위협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문항이 사전에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가설과 가장 유사한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함. 이는 회귀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해명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면 아울러 한국적 상황에서 위협인식 개념을 분석적으로 정교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론적 연구가 될 수 있음.
- 아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함.

- 가설 1 : 위협 인식이 높으면 탈북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 지원에 반대할 것이다.
 - 가설 2 : 위협 인식이 높으면 대북 지원 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가설 3 : 위협 인식이 높으면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가설 4 : 위협 인식의 이러한 영향은 응답자의 가치관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될 것이다.
- 회귀 분석 모델에서 주목할 점은
- 위협 인식 중에서도 안보 위협과 경제적 위협의 영향을 비교
 - 위협 인식과 가치관 변인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회귀 분석을 하고 모델 적합도 및 R2 변량을 비교 분석함.

3. 회귀분석 모델

- 각 연도별로 아래의 모델에 따라 회귀분석을 함 (연도별 문항의 차이로 투입되는 독립변인에 차이가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인구사회 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계층		
위협 인식		안보 위협 - 핵무기 위협 - 남침 위협 - 전쟁 가능성 경제 위협 - 한국경제 불만 - 경제적 개선 안됨 사회문제 심각성 - 빈부격차 심각성 - 실업 문제 심각성	
가치 변인			민주주의지지 (2017) 다문화 수용성(2012~) 한국인 자긍심 진보 보수 인식 통일 필요성
종속 변인	- 탈북자/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1)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 지지 2)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 3) 대북 지원(경제교류)보다 북핵 문제 우선 해결		

4. 분석 결과

1) 위협 인식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안보 위협인식이 높아지면 탈북자 지원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2011년만 예외). 오히려 2012년 이후에는 북핵이나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탈북자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남.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는 않으나, 안보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한 북한체제에서 탈출해온 탈북자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일단이 나타나고 있음.
- 경제 위협인식이 높으면 탈북자 지원에 부정적인 경향은 2009, 2010, 2011년에 나타남.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정부 예산을 수반하는 탈북자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다문화 수용성,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진보적 정치 성향은 탈북자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다문화 수용성, 통일필요성 인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남.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탈북자 지원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짐.
- 단계별 R2 변량을 보면,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는 위협 변인보다는 가치관 변인들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고 있음. 즉, 위협 인식보다는, 통일의 필요성이나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긍정적 지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모델에 따르면, 탈북자로 인한 경제적 위협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위협 인식과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일반적으로 위협 인식이 높아지면 인도적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북한 주민에 대한 우선적인 인도적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항이 없어, 대북 지원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태도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음.
- 예상과는 달리, 안보위협 인식은 대북 지원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달리 표현하면, 북한의 핵이나 무력도발 위험이 커진다고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 모델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 이와 달리 경제 위협 인식은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뚜렷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많은 사람들이 대북 지원 정책을 (안보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차원보다는)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흥미로운 점은 2015년 이후 경제적 위협인식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대북 지원이나 경제교류가 단절된 때문으로 분석됨.
- 대북 지원에 대한 태도는 가치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 통일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대북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영향을 일관되며 통계적 유의도도 높음. 다문화 수용성도 유의도가 높은 편임. 정치적 보수 성향은 대북 지원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2010~12년 동안 나타나다가 2013~16년에는 사라짐. 2017년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뚜렷하게 대립되는 현상이 나타남.

- 전체적으로 위협 변인보다는 가치관 변인이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위협 인식과 “지원보다 북핵 우선 해결”에 대한 태도

- 일반적으로 위협인식이 높아지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교류보다는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입장에 더 강화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조사 문항 중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으나, 2017년에 표현이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북핵 문제 우선 해결”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음. 특히 ‘북핵 위협’ 요인의 영향은 2015,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통계적 유의도가 높게 나타났음.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도 마찬가지로 “교류협력보다 핵동결 우선”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위협인식은 부분적으로 “북핵 문제 우선 해결” 정책에 대한 지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북핵 우선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향은 2010-2011년 사이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는 경제적 위협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
- 가치관 변인의 영향을 보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북핵 우선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짐. 또한 보수적 성향은 북핵 우선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지만, 진보 성향으로 인해 이에 반대하는 흐름은 2010년을 제외하면 나타나지 않았음.
- 전체적으로 북핵 우선 해결을 강조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는 가치관 요인보다는 위협 변인에 의해 주로 설명되고 있음.

5. 결론

- 조사 시점이 최근 북핵 위기가 표면화되기 이전(2017년 7월)이므로, 이번 분석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핵 위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직접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탈북자 지원, 대북 교류 확대 또는 억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도·정치적 요인(정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정파적 진영논리)이 아닌 사회적 요인, 즉 안보 위기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에 의해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의미가 있음.
-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는 위협 인식보다는 가치관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됨.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 태도가 탈북자에 대한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임.
- 대북 지원과 교류를 지지하는 태도는 안보 위협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지만 경제적 불안감

이 높아질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남. 대북 지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교류보다 북핵 억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는 안보 위협인식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안보 불감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회귀 분석 결과, 시민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에는 경제적 위협 인식이나 안보 위협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북한의 핵무장으로 존재론적 안전이 위협받게 될 때, 시민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정책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특히 통일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안보 위기 상황의 강경 대응과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 결과가 시사해주고 있음.

<회귀분석 1>

종속변인 : 탈북자 정부지원 증가지지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매우 동의함)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1.442***	1.782***	1.509***	1.750***	1.370***	1.253***	1.345***	.805**	1.763***	2.309***
인구사회	남성(d)	.050	-.009	.042	.066	.070	.040	.043	.047	.058	-.041
	19~29세 (d)	-.055	-.080	-.024	-.079	.036	-.026	.007	-.042	-.130	-.012
	30대 (d)	.026	-.047	-.015	-.049	-.103	-.073	.026	-.014	-.077	-.060
	50대(d)	-.075	.146*	-.005	.032	.041	-.036	-.001	.033	-.057	.035
	60대 이상 (d)	-.081	-.128	-.171	.054	-.004	-.027	-.012	-.022	.059	.061
	중졸이하(d)	-.147	-.173*	-.058	-.141	-.279**	-.033	.098	.018	-.052	.070
	대재이상(d)	.013	.182***	.140**	.175***	.083	.054	.047	.032	.053	-.038
	소득 200 미만(d)	-.109	.031	.228**	-.084	.124	-.050	.102	-.225*	-.176*	-.113
	소득 200_299 (d)	-.053	-.001	.092	-.009	.068	.009	.050	-.093	-.010	.068
	소득 400이상 (d)	.085	.039	.209	.078	.005	.023	.048	.062	.054	.049
인생	북핵위협	.011	-.018	-.012	-.060*	-.041	-.017	-.012	.002	-.023	.074*
	무력도발가능성	-.015	.037	-.032	.020	.022	.022	.070*	.017	.040	.048
	한반도 전쟁가능성	-.025	.026	.032	.063*	.074*	-.003	-.053	-.002	-.003	.006
	생활수준 불만	.014	.016	.013	-.042*	.000	.004	-.011	.029	-.007	-.017
	한국경제 불만	-.034	-.095**	-.106**	.004	-.049	-.064	-.030	.001	-.012	.019
	빈부격차 심각성	.017	.059	.099*	.064	.029	-.011	-.036	.089*	.006	-.035
가치관	실업문제 심각성	.043	.036	.078	-.035	.005	.040	.026	.002	-.062	-.053
	민주주의가치										-.056
	다문화 수용성					.119***	.176***	.090**	.153***	.104***	.180***
	한국인 자긍심	.143***	.007	.042	.066*	-.005	.082*	.133***	.165***	.043	-.002
	진보(d)	.045	.145**	.134**	.124**	.077	-.030	.049	-.016	-.023	.106*
	보수(d)	-.003	-.051	-.047	-.013	-.042	-.103	.052	-.071	-.140*	-.007
모델	통일 필요성	.190***	.138***	.123***	.139**	.154***	.121***	.121***	.086***	.116***	.126***
	r square	.153	.116	.117	.126	.159	.107	.085	.112	.080	.126
	F	9.784***	7.211***	7.323***	8.002***	9.920***	6.307***	4.851***	6.642***	4.639	7.271***
R2 변량	위협변인	.014	.017	.025	.016	.020	.010	.010	.018	.006	.015
	가치관	.107	.058	.051	.065	.091	.079	.061	.079	.053	.100

<회귀분석 2>

종속변인 : 대북지원정책 긍정 평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되지 않음 ~ 4. 매우 도움된다. (2017년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2.088***	2.121***	2.199***	2.243***	1.903***	2.237***	2.680***	1.746***	2.181***	1.601***
인구사회	남성(d)	.109*	-.010	-.006	.028	.028	.001	-.019	-.034	-.003	.004
	19~29세 (d)	.010	-.029	-.032	-.070	-.097	-.155*	.036	.017	-.123	.047
	30대 (d)	.074	-.065	-.200**	-.075	-.014	-.047	.053	.079	-.049	.064
	50대(d)	-.001	-.075	-.007	.055	.027	-.016	.010	.005	.034	.172*
	60대 이상 (d)	.022	-.122	-.092	-.131	-.109	.159	.002	.139	-.085	.225**
	중졸이하(d)	.162	-.080	-.078	-.011	-.078	-.240*	-.167	-.026	.077	-.018
	대재이상(d)	.130*	.057	.143*	.153**	.109*	.058	-.045	-.081	-.002	.077
	소득 200 미만(d)	-.227**	.111	.093	-.012	.170*	-.072	-.010	-.115	-.167	-.038
	소득 200~299 (d)	-.098	.027	-.021	.109	-.014	.027	-.006	-.071	-.030	.099
	소득 400이상 (d)	-.089	.098	-.059	-.023	.025	.012	-.022	.029	-.049	.046
의견	북핵위협	.039	.035	.015	-.105	-.055	-.012	.028	-.025	-.023	-.047
	무력도발가능성	-.049	-.054	-.044	-.024	-.059	.073*	-.051	-.007	.024	.026
	한반도 전쟁가능성	.032	.009	-.038	.004	-.010	.057	.005	-.068	-.050	.023
	생활수준 불만	.006	.002	-.017	-.021	.075**	.004	.008	.053*	.032	-.016
	한국경제 불만	-.128***	-.131***	-.063	-.068*	-.081*	-.111**	-.117**	-.048	-.074	.013
	빈부격차 심각성	-.007	-.001	.017	-.056	-.074	-.070	-.007	.067	-.006	-.095*
가치관	실업문제 심각성	.028	.043	-.043	.079	.012	.093	-.025	-.035	-.044	.027
	민주주의가치										.034
	다문화 수용성					.097***	.016	-.104***	.113***	.102***	.091***
	한국인 자긍심	.002	-.020	.028	.024	.057	-.129**	.034	-.009	.001	.012
	진보(d)	.033	.205**	.051	.100	.083	-.009	-.005	.161**	.081	.136**
	보수(d)	-.049	-.085	-.162*	-.123*	-.148*	-.062	-.001	.105	-.089	-.205**
모델	통일 필요성	.139***	.152***	.167***	.148***	.146***	.114***	.149***	.132***	.104***	.110***
	r square	.100	.095	.094	.112	.130	.070	.082	.093	.059	.088
R2 변량	F	6.073***	5.810***	5.734***	6.967***	7.795***	3.965***	4.677***	5.375***	3.335***	4.860***
	위협변인	.020	.020	.010	.025	.024	.019	.020	.017	.006	.008
R2 변량	가치관	.045	.061	.061	.061	.076	.031	.056	.064	.043	.068

<회귀분석 3>

종속변인 : 북핵 해결 우선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2008~2015) (1. 매우 반대 ~ 5. 매우 찬성)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2016~)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		2.553***	3.027***	3.231***	3.101***	2.774***	3.072***	2.602***	2.984***	3.139***	2.391***
인구	남성(d)	.014	.022	-.014	.082	-.079	.040	.012	-.007	-.055	-.070
	19~29세 (d)	-.089	-.130	.053	-.049	.099	.044	.061	.037	.045	.041
	30대 (d)	-.060	-.078	.126	-.018	-.167	.062	-.073	.035	.044	.070
	50대(d)	-.002	.083	.076	.010	-.082	.044	.072	.089	-.035	-.047
	60대 이상 (d)	-.095	.118	-.011	.049	.101	-.077	.124	-.041	-.148	.067
	중졸이하(d)	-.044	.096	.104	-.082	-.108	-.010	.085	-.023	-.016	.025
	대재이상(d)	-.127	-.078	-.175*	-.236**	-.154*	-.052	-.082	-.093	-.023	.024
	소득 200 미만(d)	-.152	.062	.031	-.086	-.035	-.112	-.031	.073	.113	-.258*
	소득 200_299 (d)	-.009	.100	-.039	-.055	.137	-.193*	.035	.100	.131	-.153
	소득 400이상 (d)	-.079	.058	.087	.069	-.072	-.204**	.055	.008	-.049	-.098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위협	북핵위협	.089*	.224***	.152**	.158***	.179***	.225***	.083	.077	.139**	.214***
	무력도발가능성	.116*	.033	.197***	.140**	.084*	.083	.095*	.123**	.074	.148**
	한반도 전쟁가능성	.058	.114*	-.009	.078	.044	-.021	.115*	.059	.011	.060
	생활수준 개선 불만	.021	-.010	-.007	-.017	-.049	-.033	-.072*	-.029	.065*	.015
	한국경제 불만	.026	.019	-.130**	-.123**	.053	.004	.043	.041	-.125*	-.069
	빈부격차 심각성	.031	-.179**	-.148*	-.014	-.041	.036	-.011	.088	-.040	-.076
	실업문제 심각성	.101	.099	.126*	.087	.005	-.017	.105*	-.077	.077	.063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치관	민주주의가치										.072
	다문화 수용성					.033	-.007	-.018	-.020	-.112**	.046
	한국인 자긍심	-.031	.020	-.023	.029	.026	.009	.089	.031	-.001	-.109*
	진보(d)	-.101	-.137	-.174*	-.117	-.133	-.074	.106	.038	-.119	-.003
	보수(d)	.125	.103	.098	.006	.139	.238**	-.008	.015	.226**	.180*
	통일 필요성	-.084***	-.146***	-.074**	-.200***	-.104***	-.088**	-.144***	-.115***	-.024	-.100***
모델	r square	.067	.109	.086	.105	.092	.075	.061	.044	.059	.089
	F	3.951***	6.779***	5.175***	6.528***	5.288***	4.239***	3.362***	2.428***	3.348***	4.938***
R2 변량	위협변인	.035	.061	.056	.047	.037	.038	.026	.023	.026	.057
	가치관	.019	.031	.017	.047	.023	.024	.027	.016	.025	.020